

연구총서 99-10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
경제부문 중심으로

최 수 영

통일연구원

요

약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북한은 강성대국 건설을 내세우면서 경제회생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비록 강성대국 건설이 시작된지 1년여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강성대국 선언 이후 경제부문에서 과거와는 다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과연 북한의 노력이 성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완충기와 마찬가지로 실패로 끝나고 부작용만 양산할 것인지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다. 본 연구는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의 등장시기와 경제정책의 변화, 완충기의 경제운동과 성과, 강성대국 건설 추진과 실적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북한 경제정책 방향을 전망하고 있다.

북한은 강성대국론을 주장하면서 김정일시대의 새로운 목표를 대내외에 선언하였다. 김일성 사후 북한은 새로운 경제정책을 제시하지 않고 완충기의 경제전략인 3대제일주의를 답습하였다. 그러나 지금 북한은 강성대국 건설을 내세우면서 김일성시대와는 구별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강성대국 건설은 공식적으로 1998년 8월 <강성대국>이 발표된 이후 시작되는 것이지만 강성대국 건설에서 제기되는 경제정책 방향은 그 이전에 나타나고 있었다.

1998년 신년 공동사설은 완충기의 신년사와는 경제정책의 운용과 내용면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98년을 기점으로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는 3대제일주의 관철에서 먹는문제의 해결과 선행부문의 정상화로 전환되었고, 또한 경제방침이 보다 구체화되고 실천적인 면이 강조되고 있다. 1999년 신년사에서는 이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하면서 아울러 실리를 추구하겠

다는 양면성을 가진 경제관이 등장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강성대국 건설은 이미 1998년 초부터 진행되어 왔으며 <강성대국> 발표와 함께 공식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제3차 7개년계획이 실패로 끝나고 식량 및 소비재 부족으로 인한 주민불만 증대가 권력승계 및 체제수호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 경공업 및 무역 육성을 통해 주민생활수준 향상 및 수출증대를 도모하려 하였다. 동시에 중공업우선정책에 따른 산업구조 불균형이 경제회복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3대제일주의를 관철함으로써 이를 시정해 나가고자 하였다.

그러나 3대제일주의하에서도 경제위기는 심화되고 1994년 말부터 심각한 식량난이 발생하자 북한은 어려운 경제현실과 타협하는 방향으로 경제를 운용하고자 하였다. 공식적인 생산체계 및 배급체계가 와해된 상태에서 주민들의 자구적인 경제활동을 용인할 수밖에 없었으며 농업부문에는 '새로운 분조관리제'를 실시하고 나진·선봉지대에 대해서는 제한적이지만 시장경제요소를 도입하였다.

완충기 동안 3대제일주의의 시행과 부분적인 구조조정(개혁조치)들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채 오히려 경제난은 심화되었다. 식량 및 생필품 부족, 산업 각부문의 물자부족 심화로 경제활동은 극도로 위축되었고, 이런 부족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공장·기업소 및 주민들의 자구활동 증대로 계획경제부문의 위축과 비공식부문의 확산이 급속히 진전되었다. 따라서 북한은 1997년 10월 김정일의 당총비서 취임을 계기로 완충기 경제정책의 실패를 거울삼아 이완된 사회주의 계획경제질서를 재확립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시도를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 방침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강화와 변화된 현실 수용 및 실리추구로 요약될 수 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강화

하기 위해 자력갱생, 자립적 민족경제건설 및 중공업우선정책을 강조함과 동시에 국가의 중앙집권적, 통일적 지도를 내세우고, 개혁·개방을 거부하면서 자본주의적 요소의 침투를 경계하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은 변화된 현실의 일부를 수용함으로써 주민들의 불만을 완화하고 주어진 조건과 환경에 맞게 실리 위주의 경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계획경제부문의 정상화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북한은 자력갱생에 의한 내부예비를 총동원하는 수단으로 「제2의 천리마대진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김정일의 경제부문에 대한 현지지도를 통해 강성대국 건설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와 같이 강성대국 건설 방식은 김정일이 현지지도시 제기한 과업을 인민들이 「제2의 천리마대진군」을 통해 철저히 수행하는 것이다.

북한은 강성대국 건설의 선차적인 목표로 먹는 문제의 해결과 선행부문의 생산정상화를 내세우고 있다. 먹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농업부문에서 이모작, 감자증산 및 토지정리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풀먹는 짐승사육과 양어사업을 전군중적 운동으로 전개하고 있다. 선행(기간)산업부문의 생산정상화를 위해서는 특히 에너지 증산을 최우선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석탄증산을 위해 갯 증설과 새탄광을 개발하고, 전력부문에서는 중소형발전소의 대대적인 건설 및 대규모 수력발전소 건설에 주력하고 있다. 북한은 1998년에 이어 1999년에도 강성대국 건설에서 중요한 부문인 농업과 기간산업부문에 대해 국가예산을 증액 편성하였다.

북한은 1999년에 들어서서 경제활동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부각시키면서 경제가 회복기에 들어갔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곡물생산의 증가, 에너지 문제의 개선 등을 통해 볼 때 어느 정도 뒷받침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경제상황 호전의 조짐이 강성대국 건설에 따른 경

제정책의 변화에서 기인한다고 단정짓기는 시기상조인 것 같다. 북한은 자체 노력과 함께 국제사회의 지원을 통해 경제난을 완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경제정책의 성격은 '보수적 실용주의'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강성대국 건설을 통해 완충기 경제후퇴의 과정에서 나타난 이완된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복원하고 동시에 이미 변화된 경제현실은 수용하면서 실리를 추구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북한 경제정책의 양면성, 즉 '보수적 실용주의'는 지난 시기의 정책적 실패에 대한 반성과 개혁·개방의 비용과 편익에 대한 계산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최대 현안은 경제회생과 체제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며 '보수적 실용주의'는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다. '보수적 실용주의'하에서 북한은 보다 유연하게 경제를 운용해 나갈 것이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농업부문에서의 실질적인 농가책임제,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외화획득, 경제특구의 다양화 및 특화, 주변국과의 협력하에 기존 중공업시설 복구, 수출증대를 위한 생산단위의 대외무역 분권화, 소비재유통부문 확충 등이다.

이렇게 한다면 비록 북한이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공개적으로 개혁·개방을 거부하고 자립경제노선 추구를 주축으로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고수하더라도 실질적인 개혁·개방이 대내외적으로 추진됨으로써 경제회생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목 차

I. 머리말	1
II. 강성대국 건설과 등장 시기	4
1. 강성대국 건설의 공식 등장	4
2. 경제시책 변화와 강성대국	6
III. 완충기의 경제운동과 성과	14
1. 3대제일주의 채택	14
2. 개혁·개방 지향 경제조치	23
3. 완충기(1994~97)의 경제성과	31
IV. 강성대국 건설 추진과 실적	48
1. 강성대국 건설의 정책방향	48
2. 강성대국 건설의 추진방식	57
3. 경제부문별 사업전개와 실적	67
4. 1998~99년 경제의 종합평가	82
V. 맺음말	88
참고문헌	92

표 목 차

<표 1> 신년사에 나타난 북한의 주요 경제방침과 과제	11
<표 2> 북한의 주요 경제지표	33
<표 3> 북한의 식량수급 현황	36
<표 4> 북한의 에너지 생산 및 도입 실적	39
<표 5> 북한의 주요 원자재 생산 추이	41
<표 6> 북한의 재정예산 추이	43
<표 7> 북한의 재정수입 비교	43
<표 8> 김정일의 경제부문 현지도 현황	63
<표 9> 정부차원의 대북지원	87

I. 머리말

1990년대 들어와서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는 북한은 제3차 7개년 계획(1987~93)이 끝났지만 새로운 장기 경제개발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경제난 심화에 따라 식량, 생필품을 비롯한 각종 원자재 부족으로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공장·기업소의 생산활동은 급격히 붕괴되었다. 이 과정에서 사회주의 계획경제부문은 위축되고 사적 경제활동의 증가에 따른 비공식부문이 북한 전역에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김일성 사후 완충기 동안에 더욱 심화되어 나타났다. 북한 당국은 일반 주민들과 각급 경제단위들이 자구책의 일환으로 행하는 비합법적 경제행위를 묵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농업, 경공업, 무역제일주의를 내세우면서 당면한 부족현상을 완화하고 경제를 회생시키려는 북한의 노력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부족의 악순환과 사회주의 계획경제 질서의 문란을 초래하였을 뿐이었다.

1998년 8월 북한은 새로운 국가건설 방식을 대내외에 선언하였다. 강성대국을 건설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내놓으면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자립경제를 확립하는 것이 강성대국을 지향하기 위한 일차적인 과제라고 강조하였다. 이후 북한은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제2의 천리마 대진군」 운동을 벌여나가고 김정일이 경제부문에 대한 현지지도를 강화하는 등 경제회생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의 문건들은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자립갱생, 중공업 우선, 개혁·개방 거부와 자본주의 요소에 대한 경계, 국가의 지도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동시에 변화된 조건과 현실에 맞추어 경제에서의 실리를 추구하는 것도 강성대국 건

2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 경제부문 중심으로

설에서 요구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북한은 변화된 경제현실의 일부를 헌법 개정을 통해 수용하기도 하였다. 강성대국 건설방식에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방침과 현실수용적인 방침이 함께 내재해 있다.

북한에서 강성대국 건설이 공식적으로 시작된지 1년여 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강성대국 건설의 경제부문 성과를 논하기는 너무 이른 감이 있다. 그렇지만 강성대국 선언 이후 경제부문에서는 과거와 다른 변화들이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먹는 문제의 해결과 기간산업부문의 생산정상화를 위한 북한의 투쟁이 가일층 강화되고 있다. 과연 이러한 북한의 노력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완충기와 마찬가지로 실패로 끝나고 부작용만 양산할 것인지 새삼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다.

이 연구의 제II장 강성대국 건설과 등장시기에서는 강성대국 건설의 공식 등장을 선언한 「로동신문」 정론 <강성대국>의 내용과 관련 문헌들의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경제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신년 공동사설에서 제기되는 경제시책의 변화를 통해 강성대국 건설의 실질적인 등장시기를 다루고 있다.

제III장에서 완충기의 경제운동과 성과에서는 강성대국 건설의 배경이 되는 완충기의 경제정책과 그 성과를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완충기의 혁명적 경제전략인 3대제일주의, 새로운 분조관리제 및 나진·선봉지대에 대한 경제조치 등을 상세히 정리하고 있다. 완충기의 경제성과와 부작용에 대해서는 거시경제지표 악화, 부족현상 심화, 계획경제 위축과 비공식부문의 확산을 통해서 고찰하고 있다.

제IV장 강성대국 건설 추진과 실적은 먼저 강성대국 건설의 정책 방향을 사회주의 계획경제 강화와 현실수용 및 실용주의 추구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이어 강성대국 건설의 추진방식인 「제2의 천리

마대진군」과 김정일의 경제부문 현지도도를 약술한 후 경제부문별 사업전개와 그 실적을 알아보고 있다. 실제로 강성대국 건설이 시작된 1998년과 1999년 북한경제에 대한 종합평가가 뒤따르고 있다. 마지막 제V장 맺음말에는 본문의 요약과 결론이 담겨 있다.

II. 강성대국 건설과 등장 시기

1. 강성대국 건설의 공식 등장

북한은 1998년 8월 「로동신문」 정론을 통해 <강성대국>론을 제시하면서 김정일시대의 새로운 목표를 대내외에 선언하였다.¹⁾ 북한은 강성대국을 “주체의 사회주의나라”로 규정하고 “나라와 민족의 진정한 강성과 부흥은 자주의 길에 있으며 사회주의의 길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강성대국>에서 북한은 “참된 강국은 자력갱생의 나라”이고 이러한 “부강조국건설의 최대의 원칙, 필승의 보검은 주체의 정신, 자력갱생에 있다”고 하면서 “사상의 강국을 만드는것부터 시작하여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튼튼히 세우고 그 위력으로 경제건설의 눈부신 비약을 일으키는 것”이 김정일의 주체적인 강성대국 건설방식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강성대국 건설을 계기로 “최근 몇 년간 제국주의자들의 것처럼 검질긴 경제적붕쇄와 참혹한 자연재해의 파괴력을 견디어 낸 우리의 강력한 자립적민족경제가 이제 또다시 룡마를 타고 무제한한 용을 쓸 때가 왔다”고 하면서 자립적 민족경제의 우월성을 내비치고 있다.

이어 「로동신문」 사설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해나가자>에서 북한은 사상, 정치, 군사의 강국으로 정의하고 있는 강성대국을 지향하기 위한 일차적인 과제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자립경제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²⁾ 또한 「로동

1) “강성대국,” 「로동신문」 정론, 1999.8.22.

신문」, 「근로자」 공동논설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을 끝까지 견지하자>를 통해 “세계는 다가오는 21세기의 주체의 강성대국, 자립경제의 강국으로 전변된 변영하는 사회주의 조선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³⁾

한편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북한은 경제정책의 변화를 시사하는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을 끝까지 견지하자>에서 ‘우리식 경제구조’를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서 북한은 “우리식 경제구조는 자체의 강력한 중공업을 핵심으로 하고 모든 경제부문이 조화롭게 갖추어진 자립적인 경제구조”로서 향후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 데 대한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기본노선을 튼튼히 틀어쥐고 나감으로써 우리식 경제구조의 위력을 끊임없이 강화해 나갈 것”을 내세우고 있다. 북한은 “어느 나라든지 자기 실정에 맞는 자기식의 처방으로 경제를 발전”시켜야 하고 “제국주의자들이 몰아오는 개혁·개방 바람을 물리치는 위력한 방도는 경제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고 주장하면서 개혁·개방에 대한 경각심을 한층 높이고 있다. 동시에 “우리는 제국주의자들의 흉악한 속셈을 옹계 꿰뚫어보고 경제의 세계화책동에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으로 맞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강성대국>과 이후 발표된 문건들의 논조는 북한의 경제정책과 경제난 해결방식에서의 변화를 분명히 보이고 있다. 북한은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이라는 기치를 내세우고 경제강국을 건설하자고 주장하면서 자력갱생과 중공업 우선 등 과거 회귀적인 경제정책

2)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해나가자,” 「로동신문」 사설, 1998.9.9.

3)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을 끝까지 견지하자,” 「로동신문」, 「근로자」 공동논설, 1998.9.17.

기조를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사회주의 원칙을 지키는 것만이 개혁·개방을 차단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개혁·개방에 대해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2. 경제시책 변화와 강성대국

북한은 김일성 사후 새로운 경제정책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강성대국 건설을 내세우면서 김일성시대와는 구별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정책의 전환점이 <강성대국>이 발표된 그때부터인지 아니면 그 이전에 이미 정책 변화가 나타나고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북한은 김일성 사망 다음해인 1995년부터 해마다 경제의 기본방침을 「로동신문」, 「청년전위」, 「조선인민군」 3지의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상세히 게재하고 있다.

1995~99년까지 신년 공동사설에 나타난 북한 경제의 기본방침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표 1>에 요약정리된 것처럼 북한은 지난 5년간 일관되게 농업증산을 통한 먹는 문제의 해결, 선행부문에서의 생산정상화, 경공업부문에서의 인민소비품 생산 증대를 중요시해 왔다. 그러나 이런 일관된 정책내용에도 불구하고 1998년 신년 공동사설부터 경제정책의 운용과 내용면에서 분명히 기존의 공동사설과는 다른 변화가 나타나고 있었다.

가. 경제정책의 우선순위 변화

북한은 1994년부터 3년간을 완충기로 설정하고 3대제일주의(농업·경공업·무역제일주의)라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완충기의 경제 전략은 완충기가 종료되는 1996년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1997년의 신년 공동사설에서도 당의 혁명적 경제전략의 요구대로 농업·경공업·무역제일주의 방침을 계속 철저히 관철할 것을 내세우고 있다. 즉 3대제일주의의 관철은 1995~97년 신년사 공동사설에서 최우선으로 제기되는 경제방침이었다.

그러나 1998년과 1999년 신년사 공동사설에서 제기된 가장 중요한 경제방침은 농업증산을 통한 먹는 문제 해결과 선행부문(기간공업부문)에서의 생산정상화이다. 다시 말하면 3대제일주의의 하나인 농업제일주의는 그 이름은 사라졌으나 여전히 북한이 최우선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로 남아 있었지만 경공업·무역제일주의는 사실상 중요성을 상실하고 있었다. 그 대신 경제난 해소의 일차적인 과제로서 선행부문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우고 기간공업부문의 생산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와 같이 5년간의 공동사설을 기초로 살펴보면 1998년을 기점으로 북한 경제정책의 우선순위가 3대제일주의 관철에서 먹는 문제의 해결과 선행부문 정상화로 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선행부문의 정상화는 중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기본노선을 견지하는 것으로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우리식 경제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중공업우선정책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1998년 신년사가 발표된 직후 「로동신문」에 게재된 <최후 승리를 위한 강행군 앞으로>와 <우리가 틀어쥐고 나가야 할 경제건설의 기본노선> 등의 사설에서도 분명히 밝히고 있다.⁴⁾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기본노선인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전략으로 다시 되돌아 온 것이다.⁵⁾

4) “최후 승리를 위한 강행군 앞으로,” 「로동신문」, 1998.1.8; “우리가 틀어쥐고 나가야 할 경제건설의 기본노선,” 「로동신문」, 1998.1.20.

5)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기본노선과 관련하여 북한은 1953년 8월에 열린 노동당 제6차 전원회의에서 이른바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과 경공업 및 농업의

나. 경제방침의 구체화

경제정책의 우선순위 변화와 함께 신년사에 나타난 또 다른 변화는 경제방침의 내용이 보다 구체화되고 실천적인 면이 강조되고 있는 점이다. 이미 1998년 신년사에서 농업증산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으로 종자문제를 해결할 것과 2모작 농사를 다그칠 것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선행부문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우기 위한 과업으로 특히 전력공업에서 기존의 발전능력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이용할 것과 중소형발전소 건설을 전군중적 운동으로 전개할 것을 강조하였다.

1998년의 신년사에 이어 1999년 신년사에는 한층 더 구체적인 경제과업이 제시되고 있다. 농업부문에서는 감자농사의 혁명, 적지적작·적기적작의 원칙에서 농업구조 개선, 두벌농사의 대대적 전개와 종자혁명의 계속적 추진 및 토지정리사업의 대대적인 전개 등을 요구하고 있다. 기간산업부문에서는 전력공업과 관련하여 대규모 발전소의 조기 조업 및 중소형발전소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과 석탄공업과 관련하여 석탄증산을 위해 탄밭을 더 많이 마련하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평양-남포고속도로를 지칭하면서 중요 대상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다.

북한이 1998년과 1999년 신년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과업들은 주로 식량문제와 에너지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것은 경제회복을 위해 이 두가지 문제의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는 북한 당

동시적 발전노선이 채택되었다고 공식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1953년 제6차 전원회의 이후에도 중공업과 경공업의 우선순위를 놓고 당내 갈등이 존재하였다. 1956년 4월 노동당 제3차 당대회에서 김일성은 5개년 계획 역시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에 의거하면서 농업과 경공업을 보다 급속히 발전시켜야 한다”고 발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1956년에 들어와 발전노선과 관련한 갈등의 실질적 해결이 이루어지고 중공업우선의 사회주의 경제건설 노선이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국의 인식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에너지의 부족으로 인한 산업전반의 침체 가중과 식량부족에 따른 인민의 노동의욕 저하 때문에 완충기의 혁명적 경제전략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 신년사에서 제기된 구체적인 과업들은 김정일의 현지도 등을 통해 전군중적 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렇지만 1997년까지의 신년사에는 각분야의 달성목표가 주로 열거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다. 양면적 경제관의 등장

경제정책의 우선순위 변화와 경제방침의 구체화 현상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이미 1998년 신년사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1999년 신년사에는 1998년을 포함한 과거 신년 공동사설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방침이 제기되고 있다. 즉 북한은 “새로운 국가기구체계의 요구에 맞게 경제에 대한 중앙집권적통일적 지도를 더욱 강화하며 경제사업에서의 실리를 보장하고 규률과 질서를 철저히 세워야한다”고 밝히고 있다.

북한은 1990년대에 들어와서 극심한 경제난으로 인해 각급 계획기관들의 계획화 기능과 통제적 기능이 크게 저하되었다. 반면에 북한 전역에서 비공식부문이 확산됨으로써 사회일탈현상이 만연하는 등 사회주의 계획경제질서의 이완이 심화되어 왔다. 그러나 1999년 신년사에서 제기된 것처럼 북한은 과거와는 달리 경제에 대한 중앙집권적·통일적 지도 강화 및 규율과 질서의 확립을 통해 사회주의체제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자유주의 경향의 침투·확산을 차단하고 비공식 경제활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한편 경제사업에서의 실리보장은 「로동신문」·「근로자」 공동사설 <자립적 민족경제노선을 끝까지 견지하자>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공동사설은 경제사업에서 실제적인 이익이 나게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실리를 중시하는 사업태도는 자립적 민족경제의 본성에 기초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경제발전에 실지로 이바지하는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적인 이익 실현 방도로서 “변화된 환경과 조건에 맞게 경제사업을 신축성있게 조직 전개”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즉 북한은 “지난날의 기준에 구애됨이 없이 나라의 경제형편이 어려운 오늘의 조건에 맞게 사업을 효율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신년사에서 새롭게 제기된 방침은 첫째, 경제에 대한 중앙집권적·통일적 지도원칙 고수 및 경제계획부문의 질서 확립과 둘째, 경제사업에서의 실리보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나 두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 새로운 방침은 그 내용이 이질적이기 때문에 집행과정에서 서로 상충할 소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신년사를 통해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은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하면서도 아울러 실용주의를 추구하겠다는 양면성을 가진 경제관의 등장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 신년사에 나타난 북한의 주요 경제방침과 과제

	주요 경제방침과 과제
19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과 경공업,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데 계속 첫째가는 힘을 경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경리부문에서는 전인민적 소유의 우월성을 높이 발휘하고 주체농업의 관철로 알곡생산목표 달성 - 경공업부문에서는 여러 가지 섬유제품과 일용품, 식료가공제품의 생산 증대 ○ 인민경제의 선행부문들에서 혁명적 양상을 일으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력공업과 석탄공업, 철도운수 등 선행공업부문과 금속공업 부문에서 기술혁신 및 모든 생산잠재력과 가능성을 동원하여 연료, 동력문제와 수송문제의 원만한 해결 ○ 군의 역할을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의 힘으로 생활을 높이기 위한 투쟁 전개 - 전천군 상업관리소와 맹산군의 모범을 본받아 자력경쟁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지방공업 발전 - 군소재지와 농촌마을들을 알뜰히 꾸미는데서 새로운 전환 ○ 경제지도일군들은 경제조직사업과 생산지휘를 혁명적으로 수행하며 이신작직의 모범을 보일 것
19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과 경공업,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데 더욱 큰 힘을 경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경리부문에서는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주인답게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알곡생산에서 결정적 전환을 달성 - 경공업부문에서는 인민소비품 생산을 원만히 보장하고 수출품 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투쟁전개 ○ 석탄공업과 금속공업에 힘을 집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부문에 대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 수요 충족 - 철도운수부문에서는 철도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고 더 많은 짐을 더 빨리 수송 ○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내부예비를 적극동원하여 생산을 독려하고 자원을 절약 ○ 경제일군들은 경제조직사업에서 주인답게 책임적으로 짜고 들어가야 함

<p>199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의 혁명적 경제전략의 요구대로 농업·경공업·무역제일주의 방침을 계속 철저히 관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경리부문에서는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민들의 지향과 자체의 실정에 맞게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고 쌀풍년, 고기풍년 마련. 풀판을 대대적으로 조성하고 풀먹는 집짐승을 기르는 사업을 전군중적운동으로 계속 전개 - 경공업부문에서는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인민소비품 생산을 대대적으로 증대 - 무역부문에서는 수출품 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수출품 생산을 늘이며 대외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 ○ 석탄공업, 전력공업, 금속공업부문에서는 생산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고 늘어나는 수요를 원만히 보장: 철도운수부문에서는 자체의 힘으로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꾸리고 수송수단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더 많은 화물을 수송 ○ 인민경제 모든 부문, 단위에서 내부예비를 적극 찾아내며 증산 절약 ○ 국토관리사업에서는 산림조성과 강하천정리, 도로관리와 도시경영사업에서 결정적 전진 달성
<p>199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고 먹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자문제해결 - 이모작 농사의 독려 - 농업을 농민들의 의사와 자체의 실정에 맞게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수행 - 풀먹는 집짐승을 기본으로 축산업의 대대적 발전 ○ 선행부문인 석탄, 전력, 철도운수, 금속공업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존 발전능력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도처에 중소형발전소 건설을 전군중적 운동으로 전개 - 철도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꾸리고 철도운행을 정상화하고 철강재 생산 증대 ○ 경공업제일주의 방침관철에 계속 큰힘을 넣어 인민소비품 생산증대 ○ 국토관리부문에서는 산림조성과 강하천정리, 도로관리와 도시경영사업에 새로운 전환을 모색

<p>199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사에 전국가적인 힘을 넣어 먹는 문제를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자농사에서의 혁명 - 적지적작·적기적작의 원칙에서 농업구조개선 - 두벌농사의 대대적 전개와 종자혁명의 계속적 추진 - 토지정리사업에 대한 대대적 전개 ○ 기간공업부문의 생산잠재력 최대한 발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중에 있는 대규모 수력발전소의 조기 조업 - 중소형발전소 건설의 지속적 추진 - 석탄공업부문에 탄발을 더 많이 마련하고 생산 증대 - 철강재생산을 높은 수준으로 증가시키고 어려운 철도수송문제 해결 - 나라의 자원부원을 대대적으로 개발하고 평양-남포고속도로를 비롯 중요 대상건설의 적극적 추진 ○ 경공업부문에서는 인민소비품의 원만한 생산보장을 위한 투쟁전개와 지방예비화 가능성을 총동원하여 모든 지방산업공장의 만가동 ○ 새로운 국가기구체계의 요구에 맞게 경제에 대한 중앙집권적, 통일적 지도를 더욱 강화하며 경제사업에서의 실리를 보장하고 규율과 질서를 확립
-------------	--

Ⅲ. 완충기의 경제운용과 성과

1. 3대제일주의 채택

제3차 7개년계획(1987~93)이 실패로 끝나자 북한은 노동당 제6기 21차 전원회의를 통해 향후 2~3년간을 완충기로 설정하고 경제구조 조정을 위해 3대제일주의(농업제일주의, 경공업제일주의, 무역제일주의)를 기본전략으로 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완충기의 혁명적 경제전략으로 북한이 3대제일주의를 채택한 것은 당면한 경제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있는 이들 분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임을 강조한 것이다.

북한은 식량 및 소비재 부족으로 인한 주민불만 증대가 권력승계 및 체제수호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 경공업 및 무역 육성을 통해 주민생활수준 향상 및 수출증대를 도모하려 하였다. 동시에 중공업우선정책에 따른 산업구조 불균형이 경제회복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3대제일주의를 관철함으로써 이를 시정해 나가고자 하였다. 즉 3대제일주의 방침은 식량난, 생필품난, 외화난 해결을 우선시하면서 기존의 중공업에 대한 우선 투자의 수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가. 농업제일주의

3대제일주의에서 가장 먼저 강조되고 있는 농업제일주의는 농업생산을 늘여 주민들의 먹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자는 것이다. 북한의

농촌은 도시나 공업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의 속도가 느렸으며 곡물생산은 1980년대 중반이래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놓여 있었다. 특히 1990년대에 들어와 영농기반이 와해됨으로써 곡물생산은 더욱 감소하여 외부의 지원없이 식량난 해결이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다.

사회주의권 붕괴라는 외부충격으로 인해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3대 혁명의 하나인 농촌기술혁명에서의 농촌4화 중 기계화, 화학화는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어 버렸다. 북한은 식량난을 타개하기 위해 무너진 영농기반을 다시 세워야 했으며 이를 위해 농업부문에 대한 전국 가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했다. 따라서 북한은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제일주의를 내세우면서 가장 먼저 알곡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여나가도록 강조하였다.

북한의 농업제일주의는 ‘사회주의 건설에서 농업을 중시하고 여기에 국가적 힘을 집중하여 농업문제를 원만히 풀자는 데 그 목적을 두고있는 것’으로 ‘농촌기술혁명을 힘있게 다그쳐 농업의 공업화, 현대화를 실현하고 농업생산력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⁶⁾ 이것은 농촌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방조를 더욱 강화하고 농업부문에 대한 국가 투자의 중요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정책상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농업제일주의가 실시된 첫해인 1994년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 증가율은 전년도의 2.1%에서 6%로 크게 늘어났다.

한편 농업제일주의 방침은 ‘농업발전에 큰 힘을 넣어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농업생산을 늘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회주의 농촌경리제도를 공고히 하고 농촌테제에서와 위대한 수령님께

6) 최명규, “농촌경리에 직접 복무하는 국가기업소를 창설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 것은 사회주의 농촌건설의 합법칙적 요구,” 「경제연구」(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4.1), p. 20; 한중석, “농업제일주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 것은 당의 혁명적 경제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요구,” 「경제연구」(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4.2), p. 5.

서 전국농업대회에 보내신 력사적인 서한에서 제시된 과업을 실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⁷⁾ 김일성은 「사회주의 농촌테제」 발표 30주년을 기념하면서 전국농업대회에 보낸 서한에서 협동적 소유를 보다 사회주의적 소유에 근접한 형태인 전인민적 소유로 점차 전환하도록 지시하였다.⁸⁾ 실제로 북한은 1994년 12월에 평양시 만경대구역내 협동농장들을 통합하여 '만경대구역 국영농장'으로, 그리고 평남 숙천군내 협동농장들과 농업관련 기업소들을 통합하여 '숙천군 농업연합기업소'로 재편하였다.

북한에서 협동적 소유의 전인민적 소유로의 전환은 사회주의의 완전 승리를 위한 주요한 농업강령의 하나였고, 농민의 노동계급화와 농업의 공업화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원칙이었다. 따라서 농업연합기업소의 창설은 농업관리체계의 발전방향으로 협동농장의 기업화를 의미하지만 분명 사회주의적 소유관계의 강화인 동시에 농업에 대한 국가적 장악의 일환으로 평가되는 것이다. 즉 북한에서는 농업제일주의하에서도 여전히 당위원의 집체적 지도하에 정치·사상적 자극을 앞세우는 사회주의적 농업지도체계가 우월한 경제관리체계로 역설되고 있었다.⁹⁾

농업연합기업소의 창설은 그 본질에서 사회주의적 농업지도체계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연합기업소는 군단위의 여러 협동농장과 국가기업소, 국영농목장을 하나로 묶어 제각각 경영

7) 한충석, "농업제일주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 것은 당의 혁명적 경제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 요구," p. 4.

8) 김일성, "사회주의 농촌 테제의 기치 높이 농촌 문제의 중국적 해결을 위하여(1994.2)," 「김일성저작집 4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p. 323~326.

9) 송인택,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는 사회주의경제관리원칙들을 철저히 구현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 농업지도체계," 「경제연구」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5.1), pp. 18~20.

상 자율성을 부여하는 2중독립채산제를 실시함으로써 효율적인 기업적 지도를 실현하고 국가의 관리하에 농업생산력을 증대시키려는 것이다. 작업반독립채산제는 국영농목장에서 생산력 향상을 위한 물질적 동기 부여의 한 방편으로 활용되었다.¹⁰⁾ 결국 농업제일주의는 사회주의적 농업지도체계의 강화라는 본질적인 제약 속에서 추진되는 것이지만 농업에 국가적 지원을 늘리고 곡물생산 증대에 일차적 관심을 둔다는 의미에서 이전보다 투자의 우선성이 부여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나. 경공업제일주의

북한에서 완충기 전략의 하나로 경공업제일주의가 채택된 것은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생필품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공업제일주의는 이미 이전부터 경공업 발전의 방침 속에서 강조되어 왔던 인민소비품 증산을 국가적 차원의 전략으로 더욱 구체화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경공업제일주의는 생필품 부족문제를 타개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모든 잠재력을 다 동원하여 인민소비품 생산에서 커다란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획기적 조치’이며 ‘경공업 발전에 큰 힘을 넣어 인민소비품 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중요경제전략’이다.¹¹⁾

북한은 경공업제일주의가 제시되기 이전인 1980년대 중반부터 인

10) 윤원진, “국영농목장 독립채산제 조직형태,” 『경제연구』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5.1).

11) 서승환, “경공업제일주의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 것은 현시기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나서는 중요 전략적 과업,” 『경제연구』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4.2), pp. 8~10.

민소비품의 증산을 위한 8·3인민소비품 생산운동을 전개해 왔다. 이 운동은 1984년 8월3일 평양에서 열린 전국경공업제품 전시회를 시찰한 김정일이 “군중적으로 내부예비를 동원하고 그들의 창발성에 의거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세부에 필요한 소비품까지 원만히 보장할 수 있게하는 가장 폭넓고 활력있는 대중적인 인민소비품생산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일 것을 발기함으로써 시작되었다.¹²⁾ 8·3인민소비품이란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와 가내작업반, 부업반, 가내편의봉사원들이 지방의 유희자재와 폐기폐설물, 부산물을 동원리용하여 만든 국가계획에 없는 제품”을 말한다.¹³⁾

이 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북한은 1989년에 정무원에서 「<8월3일인민소비품> 생산 및 처리에 관한 규정」(전문 4장 17조)과 「가내작업반, 부업반 관리운영 및 가내편의봉사사업에 관한 규정」(전문 5장 26조)을 승인하였다.¹⁴⁾ 그리고 8·3인민소비품 생산 모범군(구역) 칭호를 제정하고 이 운동에 모범을 보인 단위를 대상으로 모범군(구역) 칭호를 수여하고 각 도별로는 당중앙위원회 명의로 감사문을 보내고 있다. 또한 1989년을 ‘경공업의 해’로 설정하고 경공업발전 3개년계획(1989~91)을 추진하여 인민소비품 생산을 더욱 장려하였다.

경공업제일주의는 대규모의 중앙경공업으로부터 중소규모의 지방공업과 8·3인민소비품 생산단위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모든 부문과 단위에서 여러 가지 인민소비품을 대대적으로 생산하며 소비품의 품종을 늘이고 그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은 경공업제일주의를 추진하는데 있어 주로 지방단위

12) 최인덕, “군중적운동으로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이기 위한 당위원회 조직정치사업,” 「근로자」, (평양: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1990.1), p. 80.

13) 「민주조선」, 1989.5.27.

14) 「민주조선」, 1989.5.27; 「민주조선」, 1989.8.11.

의 자체노력과 최대한의 예비동원을 통해 경공업제품의 증산과 지방 공업의 발전을 이루어 인민생활을 향상시켜 나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국가의 생필품 공급능력의 한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위에서 대주면 좋고 안대주어도 자체로 해낸다는 자력생성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국가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군단위의 지방공업을 중심으로 인민소비품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¹⁵⁾ 이와 같은 맥락에서 소비품 공급을 담당하는 지방 상업일꾼들의 헌신성을 촉구하는 '정춘실운동'과 지방공업의 발전을 위한 대중들의 자체적 노력을 촉구하는 '맹산군 따라배우기 운동'이 강조되었다.¹⁶⁾

경공업제일주의는 당장에 부족한 주민들의 소비품과 생필품 보장을 위해 경공업에 국가차원의 관심과 선차적인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이 경공업제일주의를 추진하더라도 기존의 중공업 위주의 축적방식을 포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농업제일주의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북한은 경공업제일주의를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일관된 로선으로서의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 데 대한 경제 건설의 기본 로선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¹⁷⁾ 비록 경공업제일주의에 따라 소비재 생산부문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생산수단 생산부문에 대한 투자의 감소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15) 한태홍, "군 지방경제의 종합적 발전과 인민생활의 향상," 「경제연구」(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5.1), p. 7.

16) "이런 일꾼이 인민의 참된 복무자이다: 전천군 상업관리소 소장 2층 노력영웅 정춘실동무에 대한 이야기," 「로동신문」, 1991.11.22; 정춘실운동 선구자 대회 보도와 관련 「로동신문」, 1994.12.10 참고; "맹산군의 모범을 따라," 「로동신문」, 1994.12.22.

17) 서승환, "경공업제일주의 방침을 관철하는 것은 현 시기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서 나서는 중요 전략적 과업," p. 9.

다.¹⁸⁾ 1994년 예산계획에서 경공업에 대한 투자증가율은 1993년의 4.1%보다 다소 높은 5.4%로 책정되었다.

다. 무역제일주의

사회주의 시장이 약화된 현실에서 북한은 정상적인 경제운영을 위해서 대외무역의 활성화가 시급하였다. 정치체제의 안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어느 나라와도 대외무역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1992년 2월 정무원은 「대외무역사업에서의 혁명적전환을 일으킬 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여기에서 북한은 그동안 강조했던 신용제일주의나 수출품의 질과 포장문제 외에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수출대상을 찾아내어 시장을 널리 개척하며 대외수출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을 과업으로 내세웠다. 1980년대의 대외무역 확대 방침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이 결정은 무역부 부부장 리신효에 의해 '새로운 무역체계'(이하 신무역체계)로 불리게 되었다.

신무역체계는 국가의 중앙집권적 계획적 지도밑에 대외경제위원회는 물론 생산을 담당한 위원회, 부, 도행정경제위원회들에서 무역관리부서와 무역회사를 두고 자기부문, 자기 지방에서 생산한 수출품을 직접 내다 팔고 필요한 제품들을 직접 사다 쓰게 하는 무역체계와 방법이다. 북한은 "새로운 무역체계의 중요 특징은 생산자들이 대외무역을 직접하게 하는 무역체계와 방법이라는 데 있다"고 설명한다.¹⁹⁾ 따라서 1990년대에 들어와 새로운 환경하에서 북한의 대외무역

18) 리기성,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신년사에서 제기하신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완충기와 우리 당의 혁명적 경제 전략," 「경제연구」(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4.1), p. 3.

19) 리신효, "새로운 무역체계의 본질적 특성과 그 우월성," 「경제연구」(평양:

은 1980년대와 비교할 때 상당한 입장변화를 보이게 된 것이다. 즉 무역관리의 지방분권화가 진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2년 12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4차회의에서 북한은 대외경제관련 부서(무역부, 대외경제사업부, 대외경제위원회)를 대외경제위원회로 통합하였다. 신무역체제하에서 북한은 효율적인 대외무역을 위해 정책결정은 대외경제위원회로 단일화하고 정책집행은 무역실무를 담당하는 생산단위가 직접할 수 있도록 다각화, 다양화하였다. 동시에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무역에 익숙한 ‘무역일군’을 많이 확보하여 “자본주의시장에 대담하게 진출하여 대외무역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기에 이른다.²⁰⁾

한편 완충기의 경제전략으로 내세운 무역제일주의는 북한이 견지해왔던 자립경제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보완적 관점에서 경제발전을 위한 외화획득의 주요한 방도로 그 의미가 크게 변하게 된다. 무역제일주의의 방침은 대외무역에서 수출을 우선적으로 증대시킬 것을 요구하며 이를 위해서 무역구조를 개선하고 거래형식과 방법에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대외무역의 구조개선은 “국제시장에서 수요가 높고 경쟁력있는 자체의 완제품, 가공품을 세계 여러 나라들을 대상으로하여 대대적으로 수출한다”는 것이고 무역거래의 형식과 방법에서 방향 전환은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진행하던 무역 형식과 방법에서 벗어나서 세계시장에서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는 거래형식과 방법을 적극 적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²¹⁾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2.4), pp. 30~31.

20) 김일성, “현 시기 정무원앞에 나서는 중심과업에 대하여(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 연합회의에서 한 연설, 1992.12.14),” 「김일성저작집 4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 16.

21) 조강일, “무역제일주의방침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일대양양을 일으키게 하는 혁명적방침,” 「경제연구」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4.2), pp. 11~13.

김일성의 대외무역에 대한 강조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7차회의(1994.4.7)에서는 정무원의 역할을 강화하여 대외경제정책을 활성화시킬 것을 결정하였다. 대외무역과 관련한 정무원 권한의 강화는 대외경제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당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실용주의적 입장에서 대외무역을 추진하려는 의지 표현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무역제일주의하에서 1992년에 채택된 신무역체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무역제일주의가 내세우고 있는 수출상품의 품질 제고, 무역상대의 다각화와 무역형태의 다양화는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었다. 이미 1980년대에 북한은 대외무역의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수출을 늘이는 것이며 대외무역의 확대를 위해 무역상대의 다각화와 무역형태의 다양화를 강조하였다. 특히 지방무역의 발전과 ‘변강무역’, ‘맞바꿈무역’, ‘가공무역’, ‘되거리무역’을 비롯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른 나라들과의 무역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였다.²²⁾ 다만 무역제일주의는 대외무역부문에 대한 국가투자를 늘리며 이부문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들을 무조건 우선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최단시간 내에 무역의 급격한 양적 팽창을 이룩하자는 데서 이전의 대외무역 확대방침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른 한편 무역제일주의는 이미 1980년대부터 강조되었던 대외무역 확대방침이 1990년대 사회주의 시장붕괴라는 상황 속에서 자본주의 국가와의 대외무역을 보다 강조한 의미가 강하다. 북한은 근본적으로 변화한 국제시장의 환경에 맞추어 무역제일주의하에서 새로운 무역정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그렇지만 자력갱생에 의거한 내부 원천의 철저한 동원 방침이 약화되었다기 보다는

22) 김달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대외무역을 더욱 발전시키자,” 「근로자」(평양: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1989.9), pp. 60~65.

이를 위해서도 자본주의국가를 이용하여 자본주의시장과의 활발한 교역을 통해 부족한 것을 조달하겠다는 보완적 의미가 여전히 강했다.²³⁾

김정일은 “우리는 사회주의시장을 기본으로 하는 무역정책을 자본주의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무역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 자본주의시장을 뚫고 들어가 무역을 발전시켜야 합니다”라고 언급하면서 대외무역에서 자본주의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²⁴⁾ 그렇지만 북한의 대외무역은 무역제일주의하에서도 여전히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는 기초 위에서 발전시켜나가야 하는 것이며 바로 이것이 자본주의적 대외무역 관계와 근본적으로 구별되고 있었다.²⁵⁾

2. 개혁·개방 지향 경제조치

3대제일주의하에서 경제위기는 심화되고 1994년 말부터 심각한 식량난이 발생하자 북한은 어려운 경제현실과 타협하는 방향으로 경제를 운용하고자 하였다. 외화난과 원자재난에 따른 비료, 농약 등 각종 영농자재의 부족과 함께 1995년부터는 가뭄, 홍수 등 자연재해가 겹쳐 북한의 곡물생산량은 사상 최저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북한은 공식적인 생산체제 및 배급체제가 와해된 상태에서 주민들의 자구적인 경제활동을 용인할 수밖에 없었다.

23) 최경희, “현 시기 대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방도,” 『경제연구』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5.2), p. 51.

24) 최영욱, “현시기 우리 당이 제시한 무역정책과 그 정당성,” 『경제연구』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7.2), pp. 13~18.

25) 서성준,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 로선은 자구적인 대외 무역 관계 발전을 위한 물질적 담보,” 『경제연구』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6.1), p. 11.

식량난으로 대표되는 이러한 물자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북한은 외부로부터의 도입을 늘이기 위해 1995년부터 국제사회로부터 식량지원 획득 노력을 강화하였다. 동시에 1996년부터 농업부문과 나진·선봉지대에 대해 부분적인 개혁 조치를 시행하여 생산의욕을 증대시키고 외자유치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농업부문에서는 기존의 분조관리제를 개선한 ‘새로운 분조관리제’를 실시하고 나진·선봉지대에 대해서는 시장경제요소를 도입하는 일련의 주요 결정을 취하게 되었다.

가. 분조관리제 개선

식량난을 타개하기 위해 북한은 농업제일주의를 채택하고 이 방침에 따라 농산물 증산을 위해 전국가적인 힘을 기울였지만 내부생산 증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1996년부터 시작되었다. 북한은 농장원들의 노동의욕 제고를 통한 농업생산력 증대를 위해 1996년부터 일부 협동농장에서 기존의 분조관리제를 개선한 ‘새로운 분조관리제’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1996년도의 경험에 기초하여 1997년에는 정무원 결정에 따라 ‘새로운 분조관리제’를 전국적으로 확대시켰다.

분조관리제는 1965년 김일성의 강원도 회양군 포천협동농장 현지 지도때 창안되어 이미 1966년부터 모든 협동농장에서 도입·실시되었다.²⁶⁾ 이것은 북한 농촌에서 “집단생활의 세포이며 생산 및 로력 조직의 맨아래단위”인 분조에 “일정한 면적의 부침땅과 로력, 농기구, 부림소 그밖의 생산도구들을 고착시키고 국가생산계획에 준하여 정당수확고계획과 로력일투하계획을 주어 계획을 수행한 정도에 따라 로력일을 재평가하여 그에 해당하는 분배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운영”

26) 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경제사전(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 651

하는 제도이다.²⁷⁾ 이 제도의 도입은 기존의 작업반우대제하에서는 농민들의 집단생활과 생산활동에서의 근본적인 전환이 이루어질 수 없어 농업생산 증대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기초하고 있다. 작업반보다 규모가 작은 분조를 단위로 농장원들에게 명확한 임무와 책임 한계를 제시해줌으로써 이들이 공동경리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집단주의 정신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협동농장의 분조를 단위로 실시하는 사회주의농촌경리의 내부관리 형태인 분조관리제하에서 농민들은 분배몹을 계산하는 주된 기준이 되는 노력일을 더 직접적으로 정확히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책임감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분조관리제는 그 규모가 작업반보다는 작지만 여전히 10~25명 정도의 비교적 큰 규모이고 생산계획에서도 농장원들의 자율보다는 국가적인 생산목표에 따라 지표가 설정되었으며 초과 생산물은 자유처분이 아니라 국가가 전량 수매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개인들의 물질적 인센티브를 자극하기에는 매우 미흡하였다.

‘새로운 분조관리제’는 이 같은 기존의 분조관리제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첫째, 분조구성을 주로 가족, 친척 단위를 위주로 7~8명 규모로 축소하였다. 둘째, 생산계획을 지난 3년간 평균수확고와 1993년 이전 10년간의 평균수확고를 합하여 둘로 나눈 평균치를 기준으로 책정함으로써 하향조정하였다. 그리고 셋째, 분조는 초과 생산물을 현물로 분배받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²⁸⁾ 따라서 분조의 축소를 통해 집단주의하에서도 개인의 능력발휘가 어느 정도 보장되었고, 생산계획의 하향조정은 농민들에게 초과생산의 가능성을 열어주었으며, 특히 초과생산물의 자유처분은 사적거래의 활성화와

27) 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경제사전(1)」, p. 651.

28) 「조선신보」, 1997.7.16.

시장기능의 확대를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분명히 노동의욕 향상과 능력제고를 위한 물질적 자극의 강화조치이다.

‘새로운 분조관리제’는 생산계획을 하향조정하고 있지만 과거 1993년 이전 북한의 농업통계가 과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농민들이 하향조정된 생산계획조차 제대로 초과달성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농장원들이 생산계획을 초과달성할 수 없다면 초과생산물에 대한 자유처분권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다. 동시에 경제난 가중에 따른 비료, 농약 및 각종 영농자재가 거의 공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분조관리제’의 성과를 기대하기는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새로운 분조관리제’는 물질적 자극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치였으나 농업제도의 개혁에는 전반적으로 미흡하고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보장해 주기에는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북한은 1997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주최 세미나(11.24)에서 농산물 가격 자율화, 소규모 농산물 시장 활성화, 단위작업반에 대한 보너스제도 채택, 과학영농달성 등 4개항의 농업개혁방안을 발표했다.²⁹⁾ 이러한 개혁방안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그동안 모든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가 원칙적으로 통제되어 온 북한에서 향후 기본곡물(쌀, 옥수수 등)을 제외한 농산물은 소규모 농산물 시장 또는 농민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결정된 가격으로 거래된다. 보너스제도는 단위작업반이 스스로 생산계획과 노동력 배분 및 지출계획을 수립하고 초과생산량은 ‘새로운 분조관리제’에서 처럼 자유처분토록 자율권을 확대한 것이다. 비록 언제 시행될지는 미지수이나 분명히 북한에서 농업개혁에 대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29) 「동아일보」, 1997.11.26.

나. 나진·선봉지대 경제(개혁)조치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은 북한이 자본주의 국가와의 경제관계 개선없이는 당면한 경제난국을 헤쳐나갈 수 없도록 만들었다. 1991년 구소련의 붕괴로 북한은 최대의 경제협력 상대국을 상실하게 되자 중국식의 경제특구를 통해 해외자본을 유치하고자 하였다. 비록 북한은 체제불안정 요인의 증가로 정치·이념적으로는 개방정책의 확대를 더욱 우려하였지만, 경제적 요구와 체제유지를 보장해 주는 개방정책의 한 방편으로 1991년 12월 나진·선봉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선포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나진·선봉지대 구상을 발표한 이후에도 계속 비현실적인 외자유치 계획만을 고집해 왔다.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당과 정부의 지나친 간섭, 사회주의적 노동관행의 고수, 출입국 및 환율문제 등 외국투자자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는 수많은 문제들은 개선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이런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북한 당국이 개방정책을 확고히 추진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외국자본을 보호하기 위한 경제개혁을 통해서만 풀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은 나진·선봉지대에 한해 1996년에 상품가격을 시장가격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노동자의 월급 인상(약 30배 인상) 및 식량배급제 대신 식량판매제 실시 등 시장경제요소를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리고 1997년 6월부터 나진·선봉지대에 대한 그 동안의 미온적 정책에서 탈피해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단행하였다. 새로운 조치들은 나진·선봉지대를 대상으로 '외화와바꾼돈표'의 사용 폐지, 북한 '원'의 평가절하, 기업에 대한 독립채산제 적용, 자유시장 개설, 주민들에 대한 자영업 허용 및 나진대학 설립 등이다.³⁰⁾ 북한이 경제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나진·선봉

지대에 채택한 일련의 주요 결정은 향후 북한 경제정책의 향방을 가늠하는 전환점으로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1997년 6월1일부터 지대내에서는 일반화폐(북한 '원')만이 사용되며, 외화는 일반화폐와 직접 교환토록 하였다. 외화의 교환비율은 1달러당 200'원' 정도(공정환율 1달러=2.21'원')로 평가절하해 현실화하고, 향후 교환비율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하기로 하였다. 북한 '원'의 평가절하는 공식적인 거래와 상당한 격차를 보여온 암시장거래를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고 가격 및 임금의 변동을 통해 외국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외자유치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다.³¹⁾

동시에 지대내 공장과 기업소는 국가계획관리체제로부터 독립하여 자율적으로 완전독립채산제의 원칙에 준해서 생산활동을 벌이도록 했다. 국영기업 및 지방기관 소유의 기업들은 「지대기업소관리운영규정」, 「지대가격규정」 등에 의거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보조금과 재정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경제단위로 전환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손익에 책임을 지고 자체의 수입재원을 자체 지출용도로 활용할 수 있고, 계획수립에서부터 생산·가격·판매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그동안 시행되어 온 국영기업의 독립채산제와 연합기업소에 대한 2중독립채산제와는 질적으로 다른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중국의 권하세관과 나진·선봉지대는 그동안 성행해온 물물교환형태

30) "Rajin-Sonbong Zone Economic Reform, Introduced on June 1," *The People's Korea* (1997.8.2~9) 참조.

31) 이러한 환율변경에 따라 나진·선봉지대에서는 가격·임금체계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일례로 호텔비는 110'원'(약 50달러)에서 1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기존의 최저임금 160'원'(약 80달러)은 초기에는 3,000'원' 수준으로 인상된 후 다시 4,000~4,500원(약 20~25달러)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고려하여 모든 가격체계를 동시에 같은 비율로 절하시키지는 않았다.

의 밀무역을 양성화하기 위해 자유무역시장을 개설하였다. 나진·선봉 지대내에 6월 17일 개장한 원정리공동시장(북·중국제자유시장)은 매주 3일장에서 4일장(화, 수, 목, 금)으로 바꾼다고 한다.³²⁾ 입장권이 있는 사람만 출입할 수 있는 원정리시장에는 중국쪽 판매대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몰리고 있다. 북한측이 내놓은 물품은 낱지, 명태, 게, 문어, 새우 등의 해산물과 도자기 등 공예품, 밥상 등 목제품이며, 중국측 상품은 쌀, 국수, 담배, 의류, 신발 등 일용품이 주종을 이룬다.

한편 북한은 원정리자유시장의 성과를 보가며 점차 다른지역에 까지 이런 조치를 확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도 자유시장의 개설이 경제난 해소에 일조를 하고 그동안 골치거리였던 밀무역을 양성화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원정리공동시장에 이어 무산(함북)에도 자유시장을 9월 중순 개설을 검토한 바 있다.³³⁾ 이런 북·중자유시장의 확대 움직임은 무엇보다 북한쪽 상인들의 요구때문인 것 같다.

지대내 주민들은 (특히 유희노동자, 실업자, 농한기의 농민) 자영업을 운영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상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³⁴⁾ 1997년 4월 제정된 「지대 가내편의봉사업 규정」은 ‘급양봉사, 가공 및 수리·수선봉사, 판매 및 수매봉사, 위생편의봉사, 여인숙봉사’와 같은 업종에 대해 지대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자영업을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나진시 중심가의 거리에는 기업단위 뿐만 아니라 개인들이 상점을 개설하여 상가와 노점이 형성되고 있다.

3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북한뉴스레터」(1997.11), pp. 10~11.

33) 「한겨레신문」, 1997.7.28.

34) 자영업 대상분야는 봉제, 음식물, 가정용품 및 가구, 수공예품, 지방제품, 재생품, 잉여농산물, 가내공업, 수선 및 수송서비스, 식당, 주택건설, 어업 및 소매업 등

북한은 유엔개발계획(UNDP)과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의 자금 및 기술지원을 받아 기존의 '나진해운대학'을 2년제의 '나진대학'으로 개편하여 지대의 관리와 운영을 담당할 인재를 육성하기로 했으며,³⁵⁾ 나진과학기술대학의 설립도 추진중에 있다. 또한 지대내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투자기업에 관한 기업창설 심의, 토지임차, 대표단 초청의 권한 행사를 대외경제위원회와의 협의없이 지방당국(나진·선봉 행정경제위원회)이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게되었다. 1997년 6월 「나진철도공사」를 설립하고 지대내 철도관리체계를 일원화하여 수송시간 단축 및 화물수송의 원활화를 이루려 하였다.

북한이 채택한 새로운 결정은 비록 나진·선봉지대 내에 국한되어 있지만 이 지대와 다른 지역과의 완벽한 격리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북한 전역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나진·선봉지대에서 북한 화폐의 가치가 1달러 당 200'원' 정도로 하락한 만큼 이 지대의 전반적인 물가인상이 불가피하고 또한 이 지대 내에서는 국영상점, 농민시장, 외국인상점 등이 실질적으로 단일시장으로 통합되는 효과도 있다. 이에 따라 나진·선봉지대 밖에서 이 지대 내로 물자를 들여보내려는 압력이 커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진·선봉지역에는 각종 세금제도(정확한 과세기준과 대상, 과세율 등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음)가 새롭게 도입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³⁶⁾ 이것은 이번 조치로 인해 지대내 공장과 기업소가 모두 독립채산제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일반주민들도 일정수준의 대금을 내고 자유롭게 상업활동을 할 수 있는 판매권을 부여받을 수 있고, 이들 자영업자는 정기적으로 소득의 일정분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35) 1998년 9월 24일 '나진기업학교'로 개교하였다.

36) 「한국경제신문」, 1997.10.13.

나진시에는 면적 3~4평방미터의 작은 가게들이 중심거리에는 50~70m에 한두개, 작은거리와 뒷골목의 입구에도 간혹 있다. 이런 가게들은 6월부터 부쩍 늘어나고 있다. 대부분 음료와 식품을 판매하는 이들 가게는 대부분 개인이 경영하지만 어떤 가게는 기업의 명의로 되어 있다. 기업이나 단위에서 경영하는 가게는 이윤을 상납하고 월급을 탄다. 나진·선봉지대내에서 중국 인민폐와 북한 ‘원’의 교환비율은 1997년 6월에는 1:25였지만 8월에는 국영상점에서 1:23, 가게에서 1:20으로 적용되고 있었다.³⁷⁾

3. 완충기(1994~97)의 경제성과

식량난, 생필품난, 외화난으로 대표되는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완충기의 혁명적 경제전략인 3대제일주의는 완충기가 끝나는 1996년을 지나서 1997년에도 새로운 경제전략이 제시되지 않은 채 지속되었다. 이것은 여전히 이들 부문에서의 부족현상이 완화되지 않고 북한경제의 장애요인으로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오히려 3대제일주의와 완충기 동안에 시행된 부분적인 구조조정 조치들은 경제난 심화에 따른 비공식부문의 확산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북한에서 계획경제부문의 위축과 비공식부문이 확산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었다.

북한은 농업, 경공업, 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경제회생을 시도하였지만 3대제일주의라는 완충기 경제정책은 시작부터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농업부문에서 분조관리제의 개선과 나진·선봉지대에서의 일련의 개혁조치를 시행하였지만 성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3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북한뉴스레터」(1997.11), p. 10.

대의관계의 경색으로 인해 에너지와 원자재 도입, 외자유치 및 수출 시장의 확대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했다. 완충기의 경제정책 운용이 실패로 끝나게 된 것은 내부자원 고갈로 투자여력이 소진되었지만 외자유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체제유지에 집착한 나머지 개혁·개방정책을 적절하게 추진하지 못했으며 3대제일주의하에서도 여전히 군수산업 중심의 중공업분야에 재원이 우선 배분되었기 때문이다.

가. 거시경제지표의 악화

계획경제체제의 모순과 패쇄적인 경제정책 운영 등으로 북한은 이미 1980년대 후반부터 경제침체가 시작되었으며 1990년대 들어 사회주의권 붕괴로 인해 이들 국가와의 대외경제관계가 거의 와해됨으로써 경제후퇴에 빠져들었다. 3대제일주의를 내세우고 어려운 경제현실과 타협하면서 완충기 경제를 운용해 왔지만 전부문에 걸쳐 경제난은 더욱 심화되었다. 그 결과 완충기(1994~97) 동안에도 계속 실질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하여 경제후퇴가 가속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의 추계에 따르면 완충기 동안 북한의 실질경제성장률은 -1.7%, -4.5%, -3.7%, -6.8%를 기록하였다.

북한의 GNP(명목기준) 규모는 1993년 205억달러에서 1997년에는 177억달러로 감소하였고 같은 기간 1인당 GNP도 904달러에서 741달러로 줄어들었다. 완충기 동안 서비스부문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산업에서 매년 생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6년과 1997년에는 광공업부문(광업과 제조업)의 산업성장률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특히 1997년에는 제조업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전년 대비 -16.8%를 기록하였다. 이중 경공업은 12.0% 감소하였고 중화학공업은 18.7%의 감소를 보였다.

<표 2> 북한의 주요 경제지표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명목GNP(억달러)	231	229	211	205	212	223	214	177	126
1인당GNP(달러)	1,064	1,038	943	904	923	957	910	741	573
실질성장률 (%)	-3.7	-5.2	-7.6	-4.3	-1.7	-4.5	-3.7	-6.8	-1.1
무역총액(억달러)	47.2	27.2	26.6	26.4	21.1	20.5	19.8	21.8	14.4
수출	19.6	10.1	10.2	10.2	8.4	7.4	7.3	9.1	5.6
수입	27.6	17.1	16.4	16.2	12.7	13.1	12.5	12.7	8.8

자료: 한국은행 「북한 GDP 추정결과」, 각년도.

한편 각종 통계를 거의 발표하지 않던 북한은 1997년 6월 이래적으로 경제통계를 일부 공개하였다. 이 통계는 북한 중앙통계국이 UN 분담금 조정을 위해 UN본부에 제출한 것이다.³⁸⁾ 이에 따르더라도 북한의 GNP는 1990년 168억달러, 1994년 93억달러, 1995년 52억달러로 대폭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1인당GNP도 1990년 835달러, 1994년 432달러, 1995년 239달러로 감소하였다. 이번 북한이 공개한 이 통계는 1995년의 GNP가 1990년의 1/3 수준에 불과하고, 1991년부터는 재정규모가 GNP를 초과하면서 1994년에는 재정규모가 GNP의 2배 이상으로 커지는 등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된다.³⁹⁾ 그렇지만 한국은행 통계와 마찬가지로 이 통계는 북한이 1990년 이후 GNP가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완충기 동안 북한의 경제난이 더욱 심각해졌음을 가늠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38) 통일원, 「주간북한동향」, 제336호(1997.6.21~6.27), pp. 16~22.

39) 북한 통계의 신뢰성에 대한 일례로 김정우 대외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은 1996년 4월 미국 조지워싱턴대 주최 세미나에서 1995년 북한의 1인당 GNP가 719달러라고 밝힌바 있으며 같은 수치(719달러)를 북한 외교부는 1997년 5월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에 1996년 북한의 1인당 GNP로 통보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사회주의권 시장의 붕괴 등으로 제3차 7개년계획 기간 북한의 대외무역은 20.9% 감소하여 1993년의 무역총액은 26.4억달러(수출 10.2억달러, 수입 16.2억달러)였다.⁴⁰⁾ 이후 무역제일주의를 내세우고 대외무역을 독려했음에도 불구하고 1997년까지 북한은 대외무역의 확대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대외무역액은 제3차 7개년계획 후반기의 26~27억달러 수준에서 20~22억달러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완충기 4년동안(1994~97) 대외무역액은 16.1% 줄어들어 무역총액은 1997년 21.8억달러(수출 9.1억달러, 수입 12.7억달러)를 기록하였다.

1990년대 들어 북한의 대외무역 감소를 주도한 것은 구소련(러시아)과의 교역감소이다. 1990년 25.7억달러로 북한 무역총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구소련과의 교역은 양국간 교역이 경화결제로 전환되고 무역협정이 폐기됨에 따라 1991년에는 4.6억달러, 1993년에는 3.5억달러로 줄어들었다. 완충기 시작년도인 1994년에는 다시 1.5억달러로 급감하였으며 1997년에는 8,400만달러 수준에 불과하였다. 구소련은 원유, 코크스 등 전략물자의 주된 공급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북한과 장단기 경제협정 및 생산협정을 통해 북한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양국간 교역 급감은 북한경제 내부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반면 북한과 중국의 교역은 1990년대 초반에도 증가추세를 보여 1993년의 경우 북한의 대중교역은 9억달러로 전년 대비 28.6% 증가하였다. 중국은 북한 원유도입량의 77.2%, 곡물도입량의 68%를 공급하고 있어 구소련과의 교역감소에 따른 충격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 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측 교역물자의 부족으로 1994년 북한의 대중무역은 6.2억달러로 감소하였으나 1997년에는 6.5억달러로 다시 회

40) 1987년 4월에 개최된 제8차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은 제3차 7개년계획기간 대외무역을 3.2배 증대시킬 것을 목표로 내세웠다.

북하였다. 북한의 최대 교역상대국인 중국은 북한이 1997년에 도입한 곡물의 53.2%, 원유의 45.8%를 제공하였다.

나. 부문별 부족현상 심화

(1) 식량난

북한의 식량난은 탈북자 및 아사자를 양산하는 등 체제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정도로 북한경제의 심각성을 가장 절실하게 대변하고 있는 분야이다. 1994년부터 농업제일주의를 표방하고 먹는 문제의 해결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지만 집단영농체제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경제난에 따른 영농자재의 부족 등으로 농업생산의 성과는 부진을 면치 못하였다. 특히 1995년과 1996년의 흉수와 1997년의 가뭄으로 인한 자연재해로 식량생산은 더욱 감소하였다. 심각한 흉수를 겪은 1995년 북한이 처음으로 국제기구에 식량지원을 요청하면서부터 북한의 식량난은 외부세계로 표출되었다.

정부(농촌진흥청)의 추정치에 따르면 북한의 곡물생산량은 1992년 427만톤 정도였으나 매년 감소하여 자연재해가 심했던 1995년 345만톤, 1996년 369만톤, 1997년 349만톤에 그쳤다. 1996년 양곡연도와 1997년 양곡연도의 곡물부족량은 감량수요기준으로 각각 233만톤과 214만톤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FAO/WFP의 공동보고서는 최저수요량기준으로 1996년과 1997년 양곡연도의 부족량을 각각 191만톤과 236만톤으로 평가하였다.⁴¹⁾ 북한에 대한 해외의 식량지원은

41) FAO/WFP, "FAO/WFP Crop and Food Supply Assessment Mission to the DPRK," Special Report, 1996.12; 1997.12; FAO/WFP 조사단보고, 1995.12.28.

1995년과 1996년에는 30만톤 정도였으나 1997년에는 84만톤으로 늘어났다.

<표 3> 북한의 식량수급 현황

(단위: 만톤)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총 수요	576	569	576	580	578	583	541	551
생산량	443	427	388	413	345	369	349	389
부족량	133	142	188	167	233	214	192	162
수입	83	109	49	96	105	163	104	98
지원	0	0	0	32	30	84	75	84
절대부족량	50	33	139	71	128	51	88	64

자료: “북한의 식량사정과 대외의존도 평가,” 통일부 보도자료 (1999.9.17).

주 : 생산량은 전년도 수치임. 1999년 수입은 7월말까지 통계(중국 8월말)이며 지원은 11월말까지임.

북한의 큰물피해대책위원회는 국제사회에 식량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1997.2.3)하였다.⁴²⁾ 이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수년간 예기치 않은 천연재해로 인해 계속하여 농업생산에 타격을 입었으며, 그로 인해 일시적인 식량문제가 야기되었다고 설명하면서 북한의 연간 곡물수요는 약 784만톤으로서 이중 식용으로 482만톤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1996년의 곡물생산은 걸곡(조곡)의 경우 250.2만톤에 불과한 것으로 밝혔다. 물론 북한이 국제사회에 대한 지

42) 최근 북한이 발표한 곡물생산량은 1995년 376.4만톤(UN조사단의 북한방문 시 제공), 1996년 250.2만톤(큰물피해대책위원회), 1997년 268.5만톤(알곡 214.8만톤, 농업위원회 농산국 부국장 차인석 및 큰물피해대책위원회), 1998년 283.1만톤(농업성 농산국장 차인석), 1999년 428만톤(1999년 11월 16일 김영숙 농업부상의 FAO총회 기조연설)이다.

원호소와 식량지원을 획득하기 위해 곡물수요량은 과장하고 생산량은 축소하는 등 발표 수치에 대한 신뢰성은 떨어지지만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을 충분히 엿볼 수 있다.

이러한 극심한 식량난에 대해 주민들은 농민시장을 통한 식량조달과 텃밭, 땀기밭 등에서 생산된 곡물, 옥수수의 조기 수확 및 가축의 처분 등을 통해 그나마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지속적인 감량배급 및 최소기준의 배급, 부족분에 대한 해외지원 의존 등의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식량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아니다. 또한 농업생산 증대를 위한 '새로운 분조관리제'의 도입도 영농자재 부족과 식량난에 따른 주민들의 노동의욕 감퇴로 제기능을 발휘할 수 없었다.

(2) 생필품난

북한은 제3차 7개년계획기간 공업생산은 1.9배, 이 중에서 소비재생산은 1.8배 증가시킨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이 기간 북한의 공업생산 실적은 1.5배 증가에 머물렀을 뿐 소비재생산 실적은 언급되지도 않았다. 그렇지만 북한은 8·3인민소비품 생산실적에 대해 1992년의 생산은 초기의 3.5배 이상이고 1993년의 생산은 1992년에 비해 1.2배 증가하였다고 발표하고 있다.⁴³⁾ 따라서 8·3인민소비품 생산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 빠르게 성장하여 1993년의 경우 초기보다 4.2배 증가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8·3인민소비품 생산은 1993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94년의 생산은 “이 운동이 발단(1984.8.3)된

43)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93」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93), p. 280; 「조선중앙년감 1994」, p. 179.

후 10년 동안 각지에 4만 6,500여개의 가내작업반, 부업반이 꾸려졌다. 이 기간 인민소비품생산은 3.5배, 그 가지수는 1만 1,700여종으로 늘어났고” 있다고 발표한 점으로 보아 1992년 수준에 머물고 있다.⁴⁴⁾ 8:3인민소비품 생산의 감소는 전반적인 경제난의 심화로 부산물, 폐기물 등과 같은 원자재의 확보가 어렵고, 생산된 소비재를 불법 유통시키기 위해 생산실적에서 누락시키는 경향이 심화되기 때문이다. 경공업부문에서는 전반적인 가용자원의 고갈로 1993년을 정점으로 8:3인민소비품의 생산은 감소 내지 정체하였으며, 생산단위도 1994년의 4만 6,500여개에서 1997년에는 4만 3,000개로 감소하였다.⁴⁵⁾

(3) 에너지난

완충기에도 북한은 인민경제의 선행부문인 석탄공업과 전력공업 등 에너지부문의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렇지만 국내 에너지 생산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공장가동률의 저하는 물론 수송부문에도 장애를 초래하여 모든 산업의 생산활동 위축을 심화시키고 있다. 특히 북한의 공업은 에너지 다소비형인 중공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에너지 공급의 감소는 전반적인 산업생산력 감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의 석탄생산량은 1990년의 3,315만톤에서 1994년 2,540만톤, 1997년에는 1,825만톤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석탄생산의 부진은 채탄장비의 노후화, 탄광의 심부화, 신규설비(투자)의 미비, 자재의 공급부족 등에 기인한다. 더구나 1995년과 1996년의 연이은 집중호우로 탄광의 복구가 지연되고 식량난에 따른 광부들의 의욕상실도 석

44) 「조선중앙년감 1995」, p. 158.

45) 「조선중앙년감 1997」, p. 165.

탄생산 부진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전력생산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발전량은 1990년 277억kwh에서 1994년 231억kwh, 1997년에는 193억kwh로 감소하였다. 북한의 화력 발전소는 중유를 사용하는 응기발전소를 제외하고는 모두 석탄화력발전소이다.⁴⁶⁾ 따라서 석탄생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화력발전소가 정상적인 가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발전량도 감소하고 있다. 전력공업부 부부장 주동일은 「조선신보」와의 인터뷰에서 1997년 7월 현재 북한은 수력 320만kw와 화력 310만kw의 전력생산능력에서 화력발전소의 발전량은 50만kW(이중 응기발전소 20만kW는 완전 가동)에 불과하다고 언급하였다.⁴⁷⁾ 그는 화력발전소 가동부진의 원인으로 안주지구 탄광들이 홍수피해로 석탄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과 사회주의권 붕괴로 보수·정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을 들고 있다.

<표 4> 북한의 에너지 생산 및 도입 실적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석탄생산량(백만M/T)	33.1	31.1	29.2	27.1	25.4	23.7	21.0	20.6	18.6
전력생산량(10억kwh)	27.7	26.3	24.7	22.1	23.1	23.0	21.3	19.3	17.0
원유도입량(만M/T)	252	189	152	136	91	110	94	110.6	50

자료: 한국은행 「북한의 GDP추정결과」, 각년도.

원유도입도 1990년 252만톤에서 1997년에는 110.6만톤까지 56.1%나 감소하여 에너지 부족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완충기 동안에도

46) 북-미제네바 합의(1994.10.21)에 따라 북한은 1995년 15만톤의 중유를 제공받는데 이어 경수로가 완공될 때까지 연간 50만톤을 제공받기 때문에 응기 화력발전소는 완전 가동되고 있다.

47) 「조선신보」, 1997.7.4

원유도입실적은 대체로 100만톤 내외로서 1993년의 136만톤에 비해서도 줄어들었다. 북한은 구소련으로부터의 원유도입이 거의 중단됨에 따라 북한은 1997년 일시 예멘산을 도입한 외에는 전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완충기 동안 석탄생산의 부진과 원유수입의 감소에 따라 에너지난은 심화되었다.

(4) 원자재난

북한의 산업시설 가동률 저하는 에너지부족과 함께 원자재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원자재의 부족은 에너지 부족으로 인한 공장가동률 저하에 기인하므로 에너지난과 맞물려 있고 외화부족에 따라 필요 원자재 및 연료의 수입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에너지난과 외화난으로 북한의 철강, 시멘트, 화학비료 등의 기초 원자재를 생산하는 공장의 가동률이 낮아지고 이로 인해 산업생산의 전반적인 위축을 초래하고 있다.

1990년대 들어와서 북한의 주요 원자재 생산(공급)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1993~97년 기간에 철광석은 476.3만톤에서 291만톤, 비철금속은 16.4만톤에서 10.8만톤, 강철은 186만톤에서 101.6만톤, 시멘트는 398만톤에서 334만톤, 비료는 160.9만톤에서 77만톤으로 생산이 줄어들었다. 북한은 심각한 원자재 부족을 완화하고 공장가동율을 높이기 위해 자원절약, 내부자원 활용, 대체원자재의 개발 등에 힘쓰고 있지만 에너지 및 외화 부족 등을 동시에 해결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표 5> 북한의 주요 원자재 생산 추이

(단위: 만톤)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철 광 석	186.8	547.6	476.3	458.6	422.1	344.0	291.0	289.0
비철금속	22.7	17.8	16.4	16.0	15.4	11.6	10.8	9.7
강 철	316.8	179.3	186.0	172.8	153.4	120.8	101.6	94.5
시멘트	546.9	474.7	398.0	433.0	422.0	379.0	334.0	315.0
비료	143.5	138.5	160.9	131.8	120.9	95.6	77.0	70.0

자료: 한국은행, 「북한의 GDP 추정결과」, 각년도.

다. 계획경제의 위축과 무질서

(1) 계획경제부문의 위축

북한은 매년 4월경 개최되는 최고인민회의의 보고형식을 통해 전년도 결산과 당해연도 예산을 공개해 왔다. 그러나 북한은 1994년 4월 7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의 제9기 7차회의를 마지막으로 지난 5년간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지 않다가 1999년 4월에 최고인민회의의 제10기 2차회의(4.7~9)를 개최하고 1998년 결산 및 1999년의 예산보고와 함께 인민경제계획법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1995~97년 북한의 공식적인 예산규모를 전혀 파악할 수 없었다. 다행스럽게도 국제통화기금(IMF)이 1997년 북한을 방문했을 때 북한 당국으로부터 1995년 이후의 재정추이를 포함한 각종 통계를 제공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한이 IMF에 제출한(비공개)자료와 북한의 공식 발표자료를 결합해 보면 완충기 동안 북한의 예산규모는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

을 알 수 있다. 1995년에 전년 대비 40% 이상 감소한 북한의 예산규모는 1996년에 다시 전년 대비 16% 이상 줄어들었다. 1997년의 예산규모는 1996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인 197억'원'에 불과하였다.

북한의 재정이 위축되기 전인 1991년의 자료에 따르면 북한 전체 재정수입의 92.4%가 거래수입금, 국영기업이익금, 고정재산 감가상각금 등 주로 기업소의 생산활동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재정수입이었으며, 여타 수입은 거의 무시할 정도이다. 이러한 북한의 세입구조는 1974년 북한이 '자본주의의 착취수단'인 조세제도를 공식적으로 폐지한다는 발표가 있는 이후 정착된 것이다. 기업소의 생산과 기업소간 거래에 의존하는 북한의 세입구조에 비추어 볼 때 극도로 저조한 산업가동률과 그에 비례한 공식부문의 광공업생산 감소가 재정수입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한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입수 가능한 1996년의 세입내역을 1991년과 비교하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문 생산활동의 침체 가속화가 재정수입의 감소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완충기간 동안 북한의 계획경제부문은 더욱 위축된 것이다. 이러한 계획경제부문의 위축은 극심한 에너지난과 원자재난으로 인한 공장가동 중단사태와 식량난으로 인한 북한당국의 배급능력 및 통제력 훼손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와 같은 계획경제부문의 위축으로 시장경제부문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시장경제부문의 확산은 다시 계획경제부문으로부터의 유출을 초래하여 계획경제부문을 더욱 위축시키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계획경제부문에서 비공식부문(시장경제 포함)으로의 유출은 유희인력 및 유희자재를 활용하는 8·3인민소비품 생산운동 등 다소 합법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 불법적인 형태인 권력을 이용한 사취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표 6> 북한의 재정예산 추이

(단위: 10억 '북한원')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세 입 (A)	39.6	40.6	41.6	24.3	20.3	19.7	19.8	20.4
세 출 (B)	39.3	40.2	41.4	24.2	20.6		20.0	20.4
인민경제	26.7	27.4			12.4			
사회문화	6.7	6.9			5.0			
국 방	4.3	4.5			3.0			
일반행정	0.6	0.5			0.2			
기 타	1.0	0.9						
재정수지(A-B)	0.3	0.4	0.2	0.1	-0.3		-0.2	
GDP	44.7	44.8	33.0	27.4	22.7			
세출/GDP(%)	88.6	90.6	126.1	88.7	98.4			

자료: IMF,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act Finding Report*, (Nov. 12, 1997); 「북한중앙통신」, 1999.4.7.

<표 7> 북한의 재정수입 비교

(단위: 100만 북한'원', %)

	1991		1996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총세입	37,121	100.0	20,320	100.0
거래수입금	17,252	46.5	8,080	39.8
국영기업이익금	14,259	39.1	6,290	31.0
고정재산 감가상각금	2,510	6.8	2,250	11.1
협동농장 납부금	41	0.1	180	0.9
사회보험료	77	0.2	90	0.4
국유재산 판매 및 기타	2,706	7.3	3,340	16.9

자료: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IMF,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act Finding Report*, (Nov. 12, 1997); 「북한중앙통신」, 1999.4.7.

(2) 비공식경제의 확산

1990년을 분기점으로 북한은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경제후퇴에 접어들게 됨에 따라 계획부문(제1경제)과 비공식부문(제2경제)의 영역이 급속히 허물어지기 시작하였다. 계획부문에서 불법적으로 자원이 이동하여 비공식부문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급증하였다. 이것은 계획부문의 침체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의 하나로서 대표적인 사례로는 8:3 인민소비품 생산에 대한 계획부문 물자의 전용과 각종 계획부문 물자의 불법적인 유출의 확산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농민시장과 직매점 등이 가진 합법적인 비공식부문의 기능이 암시장화하면서 통제가 불가능한 사태로 접어들었다.

더구나 완충기 경제전략에 따른 경제회복 기대는 무산되고 오히려 어려운 경제현실과의 타협에서 과생된 부작용이 경제·사회 전반에 확산되었다. 비공식부문 경제활동의 묵인, 새로운 분조관리제 실시, 나진·선봉지대의 제한적 시장경제요소 도입 등으로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이완이 가속화되었다. 계획경제부문의 인적·물적자원이 불법, 비합법적으로 유출되어 비공식부문으로 흘러 들어가 계획경제부문의 위축과 비공식부문의 확산을 초래하였다.

북한은 1980년대 말부터 비공식부문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통제 조치를 취하였지만 이러한 조치들은 얼마가지 않아 완화되는 등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북한 당국은 상당수 주민들이 비공식 부문에 참여해서 생활하는 현실을 통제하기보다는 대체로 불법적인 경제활동을 단기간 통제하다가 이를 묵인하는 소극적인 자세에 머물렀다. 그러나 완충기 동안에는 그나마 비공식부문에 대한 북한 당국의 통제는 거의 유명무실해지고 말았다.

완충기 이전 1990년대 초에 실시된 비공식부문에 대한 북한 당국의 통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암시장 성행의 한 원인인 중국상인의 북한내 유입을 통제하고자 북한은 1991년 무렵 중국인의 북한내 장사를 금지시킨 적이 있다. 그러나 중국인들과 길림성 당국의 항의가 뒤따르자 북한은 중국인의 장사를 다시 허용하고 이후 중국인을 위한 장마당을 따로 설치하여 주었다. 이 ‘중국시장’은 신의주, 만포, 혜산, 남양, 회령 등에 설치되어 있고, 접경지역인 모든 군에 한곳씩 모두 20여개나 되었다고 한다.⁴⁸⁾

둘째, 1989년 7월 평양에서 개최된 「세계사회주의 학생청년 축전」을 계기로 외화상점은 대도시의 동, 지방의 군 단위까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를 이용하는 외화보유자와 비보유자간의 위화감이 조성되는 등 사회문제가 야기되었다. 이에 따라 김정일은 1992년 외화상점·식당을 축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평양에는 평양외화상점, 낙원백화점 등 7개소만 남고 나머지는 폐쇄되었으며 외화식당도 대폭 줄어들었다. 지방에는 도소재지에 외화상점 1개, 호텔내 외화식당만 남겨두었다. 그러나 이런 조치로 외화가 제대로 회수되지 않고 소비재 부족이 심화되자 1993년부터 다시 늘어나서 현재 각 도, 시 및 일부 군에 이르기까지 수십개가 생겨났다.

셋째, 1992년에는 암시장의 확산을 초래하는 비인가시장의 폐쇄와 일일시장의 10일장으로의 전환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사적경작지의 농산물이 농민시장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됨으로써 농민시장이 실질적으로 암시장화하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1993년부터 다시 통제가 완화되었는데, 이는 식량난의 심화로 배급만 가지고서는 주민들의 생계유지가 곤란하였기 때문이

48) 서재진, 「또 하나의 북한사회」 (서울: 나남출판, 1995), p. 282.

었다. 실제로 북한 당국은 상당수 주민들이 비공식부문에 의존해서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이다.

셋째, ‘비사회주의 (타파) 그룹빠’를 1992년에 조직·운영하여 밀주제조에 따른 식량낭비 행위, 암거래 및 거간행위 등의 비공식부문 단속과 청소년 일탈현상, 사회전반에 만연하고 있는 각종 비리를 발본색원하고자 하였다.⁴⁹⁾ 북한 주민들 대부분은 이 그룹빠의 활동에 대해 “온갖 비리를 다 저지른 간부층은 제외된 채 먹고살기 힘들어 할 수 없이 법규를 어긴 일반 노동자들만 애꿎게 처벌을 받았다”고 비판하는 등 불만이 고조되었다.⁵⁰⁾ 무엇보다 이 조직의 가동으로 간부들의 비리가 노출되고 고위층에까지 비리가 확산되었음이 확인되자 1993년 말에 김정일의 지시로 중단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북한 당국의 비공식부문에 대한 대응 조치는 1980년대에도 있었지만 적극적인 것은 아니었고, 본격적인 단속과 통제는 1990년대 초에 한 차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단순히 비공식부문의 부작용이 심화되었기 때문이기보다는 정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비공식부문만 특별히 통제 대상이 된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권 붕괴에 따른 체제단속의 한 형태로서 경제부문에서 불법적인 비공식부문의 확산이 사회주의체제를 잠식하고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단속 대상이 된 것이다.

북한은 비공식부문을 직접적으로 억제·통제하기보다는 정치·사상적 동요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예방 차원에서 비공식부문에 대응해 온

49) ‘비사회주의 (타파) 그룹빠’는 1992년 10월 김정일의 지시로 평양을 비롯한 각 시, 도에 지역별로 조직·운영되었다. 지역의 검찰, 사회안전부, 당위원회, 사로청, 직맹 등 5개 기관에서 차출된 같은 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이 그룹빠의 규모는 특급기업소의 경우 약 30명, 중국과의 접경도시인 신의주는 큰기관이나 기업소가 없는데도 총300명 정도였다고 한다.

50) 「내외통신」, 주간판 제836호 (1993.2.25); 「내외통신」, 주간판 제913호 (1994.8.11); 서재진, 「또 하나의 북한사회」, p. 284에서 재인용.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공식부문에 대한 북한 당국의 강력한 통제 조치는 여태까지 행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정도의 통제조차 계속되는 식량난과 경제난 때문에 호지부지해지게 되자 비공식부문의 역할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한편 북한은 1997년 8월 5일 사회안전부 명의의 포고(1997년 8월 5일)에서 '날알을 훔치고 팔며 허실하는자들을 엄격히 처벌함에 대하여'라는 제목 아래 민·관·군에 의한 곡물절도, 상행위, 곡물을 이용한 고리대금, 불법유통 및 물물교환 행위 등은 직위, 공로, 소속을 막론하고 현행법으로 체포해 극형인 사형에까지 처한다고 경고하고 있다.⁵¹⁾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있는 북한사회에서 곡물을 둘러싼 각종 범죄행위가 민·관·군 전분야에 걸쳐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서 나온 비공식부문 경제활동에 대한 가장 강력한 통제조치라고 하겠다.

51) 「중앙일보」, 1997.10.26.

IV. 강성대국 건설 추진과 실적

1. 강성대국 건설의 정책방향

김정일이 당총비서에 취임(1997.10)한 이후 북한의 경제정책 방향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강화와 변화된 현실 수용 및 실리추구 경향으로 요약될 수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강화하기 위해 경제정책 기조를 자력갱생, 자립적 민족경제건설 및 중공업우선정책을 강조하는 등 과거로 회귀시키고 있다. 동시에 국가의 중앙집권적, 통일적 지도를 내세우면서 계획경제질서를 재정립할 것과 개혁·개방을 거부하고 자본주의적 요소의 침투에 대한 경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을 구사하는 한편 북한은 변화된 경제현실을 수용하면서 경제사업에서는 실리를 추구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극심한 경제난의 와중에서 비공식부문이 활성화되고 계획경제부문의 위축이 가속화되었다. 북한은 변화된 현실의 일부를 제도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주민들의 불만을 완화하고 주어진 조건과 환경에 맞게 실리 위주의 경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계획경제부문의 정상화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가. 사회주의 계획경제 강화

(1) 경제정책 기조의 과거 회귀

북한은 자력갱생이라는 폐쇄적인 경제원칙 및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을 강조함으로써 경제정책 기조를 과거로 되돌리고 있다. <강성대

국>에서 김정일은 강성대국 건설을 내세우면서 “누구나 다 자력갱생하고 모든 단위, 모든 지역이 다 자력갱생할 때 참된 강국을 건설할 수 있다”고 하면서 폐쇄적인 경제원칙을 강조하였다.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로선을 끝까지 견지하자>에서는 자립적 민족경제는 “자기 나라의 자원과 기술,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제발로 걸어나가는 경제”이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길은 자립의 길 이외에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와 함께 북한은 경제건설의 기본노선으로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중공업으로 전환하였다. 중공업우선정책은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킨다는 1950년대의 발전전략을 되풀이 한 것으로 1998년과 1999년 신년사에서 완충기의 경제전략인 농업, 경공업, 무역제일주의는 사라지고 그 대신 농업 및 기간산업 등에 역점을 두는 정책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중공업우선 정책에 대한 북한의 공식입장은 <최후 승리를 위한 강행군 앞으로>와 <우리가 틀어쥐고 나가야 할 경제건설의 기본노선>에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동시에 북한은 경공업과 대외무역은 중공업을 발전시키는 기초위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설명하고 “인민생활을 높인다고 하면서 중공업을 소홀히 하거나 외화가 있어야 경제문제를 풀 수 있다고 하면서 대외무역에만 치중하는 것은 옳은 방도가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⁵²⁾

이러한 경제정책 기조의 과거회귀는 완충기 전략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난에 따라 전반적인 산업의 침체현상이 심각해져 기간산업 회복이 경제난 해소의 일차적인 과제라는 인식에

52)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로선을 끝까지 견지하자,” 「로동신문」, 「근로자」 공동논설, 1998.9.17.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북한은 기간산업부문에 대한 예산을 1998년부터 증액·배정하고 있다.

(2) 중앙집권적·통일적 지도 강화

북한은 경제에 대한 중앙집권적·통일적 지도강화를 내세우면서 경제부문에 대한 내각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새로 개정(1999.9.5)된 사회주의헌법(신헌법)하에서 내각(종래의 정무원에 해당)은 국방을 제외한 국가의 모든 행정과 경제사업을 관장하는 최고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부여받고 있다. 새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내각은 최고인민회의 제9기 1차회의(1990.5.24)에서 행한 김일성의 시정연설 <우리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에서 제기된 경제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내각결정을 채택(1998.11)하였다. 여기에서 정치·사상적 위력과 집단주의 정신의 발휘, 주체적인 경제관리원칙의 고수, 경제사업과 경영활동의 계획화 그리고 우리식 경제구조의 강화를 기반으로 2002년(김정일 60회 생일)까지 달성해야 할 목표를 제시되었다.⁵³⁾

또한 북한은 경제부문에 대한 국가의 통제·감독 기능 강화 및 전통적인 계획경제의 기능을 복구·강화하기 위하여 최고인민회의 제10기 2차회의(1999.4.7~9)에서 「인민경제계획법」을 채택하였다. 「인민경제

53) 「내각결정」은 경제건설노선에서 지켜나가야 할 원칙을 밝히고 있다. 이 원칙은 사상적 요새점령을 최우선시하는 김일성의 시정연설을 기본 근거로 하고 있다. 즉 경제건설노선에서 중요한 문제는 사회주의 원칙을 철저히 실현하는 것이라 강조하고 「정치사상적 위력, 집단주의 위력」으로 해결하는 원칙, 당의 경제건설노선과 「주체적인 경제관리원칙」을 고수하고 경제사업과 경제활동을 계획화하는 원칙, 「우리식 경제구조」의 위력을 끊임없이 강화하는 원칙」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북한은 「내각결정」을 통해 주민들의 정신무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향후 2~3년간에 달성해야 할 구체적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흐트러진 경제관리부문들의 경제규율 및 계획을 재정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계획법」에서 “국가는 인민경제계획사업에 대한지도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도·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제42조)고 명시하고 있으며 “인민경제계획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 지도밑에 국가계획기관이 한다”(제43조)고 규정하고 있다. 양형섭은 「인민경제계획법」안 상정 보고에서 “경제의 계획적 관리에서 그 어떤 자유화나 분권화도 허용하지 않으며 지난 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국가의 중앙집권적·통일적 지도원칙을 고수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국가의 계획권 밖에서 어떤 경제활동도 해서는 안된다”는 방침을 천명하였다.⁵⁴⁾

국가의 중앙집권적·통일적 지도강화는 새로운 내각의 책임하에서 인민경제계획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극도로 이완된 경제계획부문의 규율과 질서를 확립하여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재정립하려는 것이다. 동시에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타나고 있는 자유화·분권화 등 자유주의 경향의 침투·확산을 차단하고 비공식부문의 확산에 따른 각종 불법적인 경제활동을 통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3) 개혁·개방 거부 및 자본주의 경계

북한은 신헌법에서 “대외무역은 국가 또는 사회협동단체가 한다”(제36조)고 규정하여 그동안 국가가 독점해 왔던 대외무역을 사회협동단체도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외자유치를 위해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 가지 기업 창설 운영을 장려한다”(제37조)는 조문을 추가하여 제한적이거나 대외개방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였다. 신헌법이 발표된 후 외부세계의 반응도 대체로 북한이 개혁·개방을 확대

54) 최고인민회의의 제10기 2차회의 둘째날(1999.4.8) ‘인민경제계획법을 채택할데 대하여’에 관한 양형섭 대의원(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의 보고.

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오히려 개혁·개방에 대한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로선을 끝까지 견지하자>에서 북한은 “제국주의자들이 염불처럼 외우는 개혁·개방타령은 사탕발린 독약과 같은 것”이라고 규정하고 개혁·개방은 모든 나라들을 제국주의자들에게 순종하게 하는 책동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동시에 “우리는 이미 주체사상의 원리에 기초하여 경제관리체계와 방법을 우리식대로 끊임없이 개선하여 왔으며 지금도 개선하고 있다. 우리의 대외경제관계도 평등과 자주성의 원칙에서 열어놓을 것은 다 열어놓았다. ... 우리에게는 이제와서 새삼스럽게 더 개혁할 것도 없고 개방할 것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개혁·개방 거부는 “돈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자본주의적 기업관리 방법과 제국주의에 문을 열어주는 개혁 개방에 대해 추호의 환상을 가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주장에서처럼 1999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⁵⁵⁾

한편 북한은 김정일체제 공식 출범 이후 경제난으로 이완되었던 그동안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국가체제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자본주의 요소의 확산을 배격하는 조치를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북한당국은 비사회주의적 현상, 자본주의적 요소를 황색바람으로 규정하고 이를 적극 배격할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미 1998년 신년사에서 “사소한 비사회주의적 요소도 허용하지 말고 철저히 경계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1999년 신년사에서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자본주의황색바람도 사소한 비계급적 요소도 허용될 수 없다”고 하였으며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 침투를 배격하자>에서는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나라들에 있어서 원자탄보다 더 위험한 것이 제국주의자들이 퍼뜨리는

55) “제국주의의 사상 문화적 침투를 배격하자,” 『노동신문』, 「근로자」 공동논설, 1999.6.1.

황색바람이다”라고 하는 등 자본주의 요소의 유입에 대해 극도의 경계심을 내비쳤다.

북한의 개혁·개방 거부와 자본주의적 요소 유입에 대한 경계는 내부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 완충기 동안 대외무역 및 외화벌이 사업과정에서 자유주의 사조와 자본주의 요소의 유입이 확대되었고 무역 및 외화벌이 일군과 관련 관리들의 부정부패는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북한은 경제회생에 필요한 외자를 받아들이는 문은 여전히 개방할 것이지만 이를 통해 비사회주의적 요소가 북한 내부에 확산되는 현상은 최대한 통제하고자 할 것이다.⁵⁶⁾ 자본주의 사상문화를 차단하고 내부결속을 다져 사회주의를 고수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1998년부터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의 명칭에서 ‘자유’를 삭제하고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로 바꾸었다. 최근 외국의 언론보도는 김정일은 북한이 자본주의로 타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번창일로에 있는 ‘자유시장’의 폐쇄를 명령했다고 전하고 있다.⁵⁷⁾ 이에 앞서 1999년 2월에도 김정일은 자유시장 운영자들에게 원래 종사하던 공공직장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등 시장통제조치를 언급한 바 있다.

나. 현실수용·실용주의 경향

(1) 변화된 경제현실 수용

강성대국 건설을 전후하여 북한은 변화된 경제현실을 법·제도적인 차원에서 일부 수용해 왔다.⁵⁸⁾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북한 전역에서는

56) 임강택, “김정일체제와 북한의 경제정책,” 『북한연구학회보』, 제3권 제1호 (1999), p. 96.

57) 『교도통신』, 1999.9.1.

58) 북한은 「의료법」(1998.1), 「무역법」(1998.3), 「에네르기관리법」(1998.5), 「발명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이것이 주민들의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으로 확산되고 있었다. 예를 들면, 비공식부문에서의 사적 생산과 판매, 그리고 지방단위 공장·기업소의 각종 외화벌이 참여 확대 등이다.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런 현상의 일부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미 1998년 신년사에서 “모든 농사일은 농민들의 의사와 자체의 실정에 맞게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해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과거 농민들은 무조건 주체농업에 따라야 하였으나 이제는 농민들의 의사와 자체 실정이 주체농업의 요구보다는 앞서게 된 것이다. 「농업법」 제1장에서 농업생산과 관리의 주체가 농업근로자라고 규정하고 인민대중의 요구와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 요구에 맞게 행하도록 확고히 하고 있다.

개정헌법 경제조항에서 나타난 변화들을 보면 첫째,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제20조)고 하여 생산수단의 소유주체를 기존의 ‘국가와 협동단체’로부터 확대하였다. 둘째, 개인소유의 주체를 기존의 근로자에서 공민으로 확대하여 “개인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제24조)라고 규정하였다. 셋째, 기존의 터발경리와 개인부업 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 이외에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한다”(제24조)고 함으로써 주민들의 사적 경제활동을 일정한 범위내에서 보장해 줄 것을 시사하였다. 넷째, “공민은 거주 여행의 자유를 가진다”(제75조)는 조항을 신설하여 주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법적으로 보장하였다. 이외에도 “대외무역은 국가 또는 사회협동단체가 한다”

법」(1998.6.11), 「공중위생법」(1998.11), 「농업법」(1999.1.29), 「양어법」(1999.3.10), 「인민경제계획법」(1999.4.8), 「대외경제중재법」(1999.8.2) 등을 제정하였다.

(제36조)고 명시함으로써 그동안 각급 기관과 단체들이 자구책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외화벌이 사업을 합법화하였다.

비록 북한이 변화된 경제현실의 일부를 법적으로 수용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북한경제의 전면적인 개혁조치의 신호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자연발생적으로 확산된 비공식부문의 시장기능을 강압적으로 억제할 경우 주민들의 생계가 악화되는 등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따르고 일부 계층의 반발도 없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주민들의 불만을 완화시키고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용인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변화된 경제현실을 수용하고 이를 제한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다.

(2) 경제사업에서의 실리 추구

최근 북한은 현실과 실리에 맞게 경제정책을 추진할 것을 시사하는 포괄적인 개념의 경제사업에서의 실리보장을 제시하고 있다. 경제관리에서 경제적 이익을 중시하고 경제사업을 주어진 조건과 환경에 맞게 신축적으로 추진하여 효율성을 높일 것을 내세우는 등 북한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리위주의 실용적인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북한의 경제사업 방식은 여러 문건을 통해 확인되고 있는데 헌법에서는 “경제관리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며 원가 가격 수익성 같은 경제적 공간을 옹계 이용하도록 한다”(제33조)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자립적 민족경제노선을 끝까지 견지하자>에서는 “변화된 환경과 조건에 맞게 경제사업을 신축성있게 조직 전개하는 것도 실제적인 이익을 실현하는 방도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지난날의 기준에 구애됨이 없이 나라의 경제형편이 어려운 오늘의 조건에 맞게 사업을 효율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한다”

고 밝히고 있다. 「국가 예산 집행 결산 및 심의를 위한 보고」(1999.4)에서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원가를 따지고 경제적 타산을 바로하며 경영활동에서 실리를 보장하는 것이 재정관리, 경제관리의 중요한 임무”라고 하였다.

동시에 북한은 법제정을 통해서 경제사업에서의 실리를 추구하고 있다. 「인민경제계획법」에서는 “국가는 사회주의 경제법칙과 현실적 조건을 옹기 타산하여 과학성, 현실성, 동원성이 보장된 인민경제계획을 세우고 계획실행규율을 강화하며 경제사업에서 실리를 내도록 한다”(제6조)고 명시하면서 현실적인 조건하에서 최대한 실리를 추구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 법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출계획의 예견된 제품을 먼저 생산하여야 한다”(제32조)고 하면서 수출상품에 대한 우선적인 생산을 통해 외화획득의 중요성을 내비치면서 실리추구를 우회적으로 시사하였다. 북한은 지지부진한 외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의 일환으로 「대외경제중재법」을 채택하였다. “국가는 대외경제분쟁해결에서 객관성, 과학성, 공정성, 신속성을 보장하여 허물없는 분쟁당사자에게 책임을 지우도록 한다”(제6조)고 하였으며, “국가는 중재활동에서 국제 조약과 관례를 존중하며 국제기구, 다른 나라들과의 협조와 교류를 발전시키도록 한다”(제7조)고 함으로써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이익 보호가 가능하게 되어 외자유치 확대를 통한 실리추구를 시도하였다.

한편 경제사업에서의 실리보장과 관련한 조치로는 내부경제의 효율화를 기한다는 측면에서 헌법 개정시 행한 행정조직의 구조조정을 들 수 있다. 내각의 행정조직(경제무역기구)은 기존의 정무원에 비해 축소 개편되었고, 대대적인 구조조정으로 전체 무역회사 수가 종래 300여개에서 100여개로 줄고 1999년 3월에는 외무성 부상이 10명에서 6명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도시경영 및 국토환경보호성을 도시경

영성과 국토환경보호성으로 분리한 것도 업무의 성격상 효율성 추구를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1998년부터 농업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는 구체적인 과업들은 실리위주의 경제사업을 대변하는 것이다.⁵⁹⁾

2. 강성대국 건설의 추진방식

북한은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1950년대에 시작된 천리마운동을 부활시켜 「제2의 천리마대진군」 운동을 벌여 나가고 있다. 1998년 1월 김정일의 현지지도시 자강도의 자력갱생 강행군 사례를 강계정신으로 개념화하고 이를 따라 배워 「제2의 천리마대진군」 운동에 박차를 가할 것을 선동하고 있다. 즉 북한은 자력갱생에 의한 내부예비를 총동원하는 수단으로 「제2의 천리마대진군」을 주창하고 있다.

동시에 김정일은 경제부문에 대한 현지지도를 강화하면서 강성대국 건설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특히 농업부문과 중공업부문에 대한 현지지도를 중심으로 김정일은 방문지 공장·기업소, 협동농장 등에 생산정상화와 증산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실행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강성대국 건설 방식은 김정일이 현지지도시 제기한 과업을 인민들이 「제2의 천리마대진군」을 통해 철저히 수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가. 제2의 천리마대진군

강성대국 건설을 추진함에 있어 북한은 “다시 한번 천리마를 탄

59) 제2장 제2절에 언급된 것처럼 1998년부터 경제정책(방침)의 내용이 보다 구체화되고 실천적인 면이 강조되고 있는 점도 확대 해석한다면 경제사업에서의 실리위주, 실용주의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세로 구보로 달려나가자”고 주장하는 등 「제2의 천리마대진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⁶⁰⁾ 북한은 김정일의 자강도 현지지도(1998.1.16~21)를 김일성의 강선제강소 시찰(1956.12.28)에 비유하면서 기존의 「천리마운동」을 새롭게 부각해 왔다. 「천리마운동」은 주민들의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인, 작업반, 직장별로 부과된 생산과제를 초과달성하도록 하는 사회주의 노력경쟁운동의 하나이다.⁶¹⁾

「천리마운동」은 사회주의 건설을 독려하기 위해 김일성이 1956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천리마를 탄 기세로 달리자”는 구호를 제시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 직후인 12월 28일 김일성은 강선제강소(현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를 방문하고, 다음해의 경제계획을 순조롭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계획이외에 1만톤의 강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선제강소의 노동자들은 이에 부응해 12만톤의 강재를 생산했으며 김책제철소에서 12만톤의 설비에서 27만톤의 선철을 생산했다. 이후 이 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천리마속도」운동으로 확대·발전되었으며 공업 총생산 등의 목표달성을 독려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

북한은 김정일의 자강도 현지지도 이후 자강도의 ‘자력갱생 강행군’ 사례를 ‘강계의 혁명정신’으로 개념화하고 이를 경제선동의 구호로 확산시켜 왔다. 이어 김정일이 성진제강연합기업소 방문(1998.3.14)시 동기업소가 “다시 한번 천리마 대고조의 선봉에 설 것”을 호소하였고 이를 계기로 ‘천리마정신’을 강조하고 ‘새로운 천리마운동’(용어 등장)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북한은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60) “제2의 천리마 대진군으로 강성대국 건설을 힘차게 다그쳐 나가자,” 「조선중앙방송」 논설, 1999.2.9.

61) 북한의 시대별 주요 노력경쟁운동에는 1950년대의 「천리마운동」, 1960년대의 「새기준·새기록 창조운동」, 1970년대의 「속도전」, 「숨은영웅 따라배우기 운동」,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1990년대에는 「우리식 사회주의 총진군 운동」이 있다.

전선에서 '새로운 천리마속도, 강행군속도'를 창조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하는 등 건설·산업 분야에서의 획기적인 노역제고를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 '새로운 천리마속도'에 의해 평양시 주요 건설현장에서 건설속도가 2.5~3배 증가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경제선동 분위기 고취와 노역배가를 강조하는 「제2의 천리마대진군」이란 용어가 본격적으로 쓰이게 된 것은 1999년부터이다. 「제2의 천리마대진군」 운동은 1999년 신년 「공동사설」에서 “김정일의 영도 따라 제2의 천리마 대진군을 다그쳐 나가야 한다”고 촉구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최근 북한은 「제2의 천리마대진군 선구자 대회」(1999.11.3~4)를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개최하고 '강성대국 건설의 획기적 전환'을 위한 사상적 결속을 촉구하고 이어 각 시·도 별로 '제2의 천리마대진군 선구자회의'를 잇달아 개최하였다. 11월 중순에는 북한 전역의 공장·기업소 등지에서 「우리 시대 영웅 모범 따라 배우기 결의모임」을 개최하기도 하였다.⁶²⁾

북한이 이처럼 「제2의 천리마대진군」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은 현재의 경제상황이 「천리마운동」이 시작되었던 한국전쟁 이후 1950년대의 어려웠던 시절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1950년대에 커다란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하는 「천리마운동」 정신의 재무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민들의 노동의욕 고취와 효과적인 대중동원을 이끌어 내 당면한 경제난을 타개하는데 총력을 경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즉 북한은 주민 노동력과 내부예비를 총동원하는 자력갱생에 의한 경제활성화 방식을 추진하는 기제로서

62) 동 결의모임은 「로동신문」 사설(1999.11.5) “우리 시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 강성대국 건설을 힘 있게 다그치자”에서 제기된 것으로 지난 8월 제7차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여자마라톤에서 우승한 정성옥 등 6명의 ‘영웅’을 따라 배우자는 운동이다. 북한은 김유봉(채탄공), 현영나(과학연구사), 이웅찬(산림감독원), 허영구(발전소 건설자) 등 새로운 ‘영웅’을 내놓고 이들을 따라 배울 것을 독려하고 있다.

「제2의 천리마대진군」을 주창하고 있다.

강성대국 건설을 주장하면서 북한에서 전개되고 있는 「제2의 천리마대진군」 운동의 기본 정신은 강계정신이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최근에 자강도와 함경남도내 인민경제 여러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면서 강성대국 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휘황한 전망을 펼쳐 주셨다 ...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강계정신을 따라 배워 제2의 천리마 대진군에 새로운 박차를 가하는 것이다”를 통해 알 수 있다. 즉 강계정신은 “만난을 뚫고 강성대국건설의 진군속도를 비상이 높여 나가는 오늘의 천리마 정신”이기 때문이다.⁶³⁾

북한이 강계정신을 「제2의 천리마대진군」 운동의 정신으로 내세우는 것은 「천리마운동」이 강선제강소의 강철증산을 계기로 시작된 것처럼 중공업관련 공장이 밀집해있는 자강도 강계시를 「제2의 천리마대진군」의 모범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천리마운동」이 중공업의 토대구축이 목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면 북한이 지금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제2의 천리마대진군」 운동의 최우선 과제는 중공업의 토대 재구축임을 알 수 있다.

나. 김정일의 경제부문 현지도

(1) 현지도의 특징

1998년 1월의 자강도 지역에 대한 김정일의 현지도는 김정일이 경제문제의 해결에 직접 나서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대단

63) “강계정신으로 제2의 천리마 대진군을 힘있게 다그치자”, 「로동신문」 사설, 1999.9.28.

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김일성 사후 1997년 10월 당총비서직에 추대되기 이전까지 김정일은 그동안의 경제적 책임과 무관함을 주장해 왔다. 이러한 사실은 1996년 12월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50주년 기념연설에서 행한 연설에 잘 나타나 있다.⁶⁴⁾ 실제로 김정일의 경제부문에 대한 현지도는 1997년에는 한두회에 불과하였다. 그렇지만 김정일은 1998년에 들어와서 9회, 1999년 10월 말까지 21회 경제부문에 대한 현지도를 수행하였다.

김정일의 경제부문 현지도는 여러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많다. 북한은 현지도에서 제시된 사업이 전국적인 대중운동으로 확산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현지도의 방문지나 지도내용은 북한의 경제정책 방향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1998년도부터 시작된 김정일의 현지도 방문지는 발전소, 철강, 기계, 자동차 등 중공업부문과 농업부문에 집중되고 있다. 특히 1998년에는 9회의 현지도 중 7회(8월 이전 4회)가 중공업부문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북한이 강성대국 건설을 공식적으로 언급하기 이전부터 이미 경제정책의 주안점이 완충기의 경제전략에서 중공업 우선으로 전환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1999년 들어와서 김정일의 현지도는 중공업부문 6회, 농업부문 11회(토지정리사업 3회, 농장 2회, 양어사업장 3회, 목장 2회, 농촌기계화사업 1회), 그리고 과학 2회, 제염소 1회, 식료공장 1회 등이다. 비록 방문회수에 있어서 중공업부문이 농업부문에 비해

64) “내가 혼자서 당과 군대를 비롯한 중요부문을 틀어쥐어야지 경제실무사업까지 맡아보면 혁명과 건설에 돌이킬 수 없는 후과를 미칠 수 있습니다. 수령님께서 생전에 나에게 절대로 경제사업에 맡려들어가서는 안된다고 하시면서 경제사업에 맡려들면 당사업도 못하고 군대사업도 할 수 없다고 여러번 당부하셨습니다. 경제사업은 다른 일꾼들과 행정경제일꾼들이 책임지고 하여야 합니다”(1996년 12월 김일성종합대학 창립50돌기념 김정일의 연설문), “우리는 지금 식량 때문에 무정부상태가 되고 있다,” 『월간조선』, 1997년 4월, p. 309.

적지만 중공업부문에 대한 김정일의 현지도는 대부분 방문지내의 여러 공장들을 시찰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방문회수만 가지고 부문별 중요성을 비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북한이 1998년 10월초 채택한 「내각결정」은 경제난 타개를 위한 각종 대책을 담고 있다.⁶⁵⁾ 내각은 몇해 안으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이미 도달했던 생산수준에까지 회복하도록 하는 전투목표를 결정하였다. 이것은 최고인민회의 제9기 1차회의(1990.5.24)에서 김일성이 행한 시정연설에서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실현하는 것으로 김정일이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자강도, 양강도, 함북도, 강원도 등에서 현지도시 제시한 경제과업을 철저하게 수행하는 것이기도 하다.

김정일의 경제부문 현지도에서 제기된 과업들은 1998년과 1999년 신년사에서 제시된 과제들과 거의 동일하다. 다만 현지도에서 제시된 과업들은 현지실정에 맞게 더욱 구체적이라는 점이 다를 뿐이다. 김정일의 경제부문 현지도는 주로 신년사에서 제기된 농업부문과 선행부문산업에 집중되어 왔다. 특히 선행부문 중에서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가장 절실한 에너지문제의 해결을 위해 전력부문에 대한 현지도를 강화하였다. 1999년 신년사에서 북한은 “전력과 석탄은 인민경제의 생명선이다”라고 하면서 에너지문제 해결에 비상한 관심을 두고 있다.

65) 「로동신문」, 1999.1.17; 「조선신보」, 1999.2.9.

<표 8> 김정일의 경제부문 현지지도 현황

<'98년도>

회수	시기	방문지	방 문 대 상
1	1.16 ~21	자강도 (강계)	강계트랙터공장, 강계정밀기계공장, 2월제강공장, 2.8기계공장, 중소형수력발전소
2	3월	함북도 (성진)	성진제강공장
3	5월	(남포시 인근)	광량만 정제소금공장(군인이 건설)
4	6. 1	자강도 (희천)	희천청년전기공장, 희천공작기계공장, 2월26일공장
5	6. 8	평남도	1월18일기계공장, 청천장기계공장
6	10. 1	양강도 (대흥단)	대흥단군종합농장, 감자연구소, 중소형수력발전소
7	10.20 ~22	자강도 (희천.만포)	희천공작기계공장, 희천청년전기공장, 2월26일공장, 희천제사공장, 희천여관(이상 희천), 압록강타이어공장, 운화공장(이상 만포)
8	11월	함북도	약전기공장, 온포3.4호발전소, 상온포.용현협농(농촌문화주택), 칠보산유원지
9	12.17	평남도 (덕천)	승리자동차공장, 덕성기계공장

<'99년도>

회수	시기	방문지	방 문 대 상
1	1. 11	평양시	과학원
2	1. 18	평북도 (태천)	태천수력발전종합기업소
3	2. 10	강원도	강원도 토지정리사업
4	3. 7	함남도 (함흥)	과학원 함흥분원
5	3. 11	강원도	강원도 토지정리사업
6	3월	함경남 북도	신흥기계공장, 단천마그네사종합공장, 단천항건설장, 함북조선소연합기업소, 6월5일전기종합공장

회수	시기	방문지	방 문 대 상
7	4월	-	송암명기 소목장
8	5월	-	1216군부대 양어장
9	5월	강원도	강원도 농촌 기계화사업
10	6월	자강도	항하혁명사적지, 대구모 발전소(장자강, 강계청년), 중소형발전소(장강3호 군민청년, 북창2호), 공장·기업소(압록강다이아, 강계뜨락뜨르), 협동농장(만포시 구성, 장강군 읍, 만포고치농장)
11	6. 27	강원도	안변군 풍화협동농장, 천삼협동농장
12	7. 13	평안북도	평안북도 토지정리사업
13	8월	양강도	대흥단군 종합농장, 삼지연군 무봉노동자구
14	8. 19	-	라효진 동무가 지배인으로 일하는 양어사업소
15	8월	평양시	새로 건설된 가금목장
16	8월	-	차주현 동무가 지배인으로 일하는 양어사업소
17	9.12 ~14	자강도	혁명사적관(낭림, 연풍), 공장(장자강공작기계, 9월방직, 희천제사, 강계포도술, 강계피복, 강계기와), 발전소(화평군 분암청년, 도 안전국), 농장(강계애국복합미생물비료공장, 장강군읍협동농장, 낭림군읍협동농장, 잠업원중장, 강계시 상업관리소 빵밭)
18	9.22 ~24	함남도	신흥기계공장, 6월1일청년전기기구종합공장, 함흥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 성천강22호발전소, 함흥성천강피복공장, 신흥양어장, 신흥유원지
19	10. 6	강원도	제757군부대 10월5일발전소, 제549 대연합부대발전소
20	10.13	함남도 (금야)	광명성제염소.
21	10.28	-	엄을룡 동무가 지배인으로 사업하는 식료공장

(2) 제기된 과업과 실행방안

[농수축산업부문] 김정일의 경제부문 현지지도시 제기된 구체적인 과업과 방안 중 농업부문에서는 알곡증산을 위해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을 것과 알곡소출을 위해 복합미생물비료, 퇴비, 두엄을 비롯한 유기질 비료로 지력을 높여 도록 하였다. 토지정리사업을 전군중적 운동으로 전개할 것과 감자농사 혁명, 적기적작·적지적작의 원칙에서 두벌종사, 종자혁명을 이루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대홍단군을 종합적 기계화의 본보기 농장으로 삼아 농촌경리의 종합적 기계화와 농촌 전기화의 추진을 요구하였다.

김정일은 감자농사에서 획기적 전환을 이루기 위해 양강도 및 함북도는 기후에 맞는 감자를 많이 심을 것, 종자혁명으로 지대에 맞는 우량품종을 개발할 것, 증산에 대비해 가공 및 저장시설을 건설할 것과 대홍단군 감자연구소에서는 감자 및 고구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것을 과제로 제시하였다.

축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강령적인 과업으로 토끼, 염소, 소, 양 등 풀먹는 집짐승을 기본으로 여러가지 집짐승을 대대적으로 사육할 것을 강조하였다. 자강도는 산이 많은 유리한 조건을 이용하여 염소, 양, 소 등 풀먹는 집짐승을 대대적으로 기르고 대홍단군은 감자를 주사료로 하는 집짐승 위주로 사육하도록 지시하였다. 토끼와 염소 기르기를 전군중적 운동으로 전개하고 모든 목장들에서 생산공정의 과학화·현대화 추진 및 우량품종 육종, 사양공들의 기술기능수준 제고, 엄격한 방역체계 수립 등의 방침도 내놓았다.

양어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지 조사후 양어장 증설, 양어장 면적의 입체적 이용 및 지대적 특성에 맞는 다양한 어종 양식,

양어사업의 전군중적 운동 추진, 모든 도·시·군들에서 자체 양어장 운영사업 추진, 양어에 대한 과학연구사업 강화 및 선진 양어방법 적극 수용, 우량품종의 육성 및 보급, 물원천 탐사사업을 강화하고 이를 남김없이 동원 이용할 것을 지시하였다.

[공업부문] 인민경제의 여러부문에 필요한 공업제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 강성대국 건설에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공장·기업소의 생산잠재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 것을 내세웠다. 공산주의적 기업관리 방식인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할 것도 아울러 지시하였다. 전력과 석탄, 금속 등 기간공업부문을 비롯한 모든 부문에서 획기적 전환을 이루자고 하였다.

특히 전기화를 앞당겨 실현하기 위해 중소형발전소 건설을 전군중적 운동으로 광범위하게 벌려야한다고 하면서 기존 발전소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지시하였다. 경제적 효과가 높은 중소형발전소들을 질적으로 건설하여야 하고 대규모 발전소 건설을 통하여 전력생산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미 건설된 대규모 발전소들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면서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강화하여 발전기의 완전가동을 보장하며, 새로운 선진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수차의 효율을 부단히 높일 것을 제시하였다.

강철생산을 정상화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위해 주체적인 제강법을 광범위하게 받아들일 것, 관련 공장·기업소에서 필요한 원자재를 더 많이 제때에 생산·공급할 것, 기술자들의 역할제고와 기술혁신운동을 전개하도록 하였다. 성진제강기업소를 비롯 금속공업부문에서 철강재 생산 전환을 지시하였다.

이외에도 현지지도시 방문한 공장·기업소(청년전기연합기업소, 희천공작기계, 2·8비날론연합기업소, 신흥화학연합기업소, 흥남비료연합기업소 등)에 대해 생산정상화를 촉구 및 품질 높은 생산을

요구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설비의 보수·정비를 잘하는 동시에 전기·석탄 등 원료·자재를 충분히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기타부문] 국토관리사업을 잘할 것을 제시하고 경제림·보호림·풍치림을 조성할 것과 강하천정리사업을 벌일 것, 도로건설 및 집주변에 과일나무를 심을 것을 내세웠다. 바다를 끼고있는 도들은 자체의 힘으로 소금정제공장을 많이 건설할 것도 지시하였다. 김정일은 현지지도를 통해 인민소비품 증산, 노동자들에 대한 후방공급사업 개선·강화 등 주민생활수준 향상 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전기난방화, 문화주택, 유원지 문화휴식터 등을 통해 인민생활을 높이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공장·기업소의 부산물을 적극 활용하여 인민소비품 생산을 늘이고 경공업공장들의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3. 경제부문별 사업전개와 실적⁶⁶⁾

북한은 국토관리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식수 및 도로·하천 정리, 제방 보수 등에 주력하고 있다. 강원도 토지정리사업을 완료하고 평안북도 토지정리사업을 진행중이다. 농업부문에서는 이모작재배와 감자재배 면적을 늘리고 있으며 풀먹는 짐승 사육과 양어사업을 전군중적 운동으로 전개하면서 염소, 토끼 사육을 늘이고 양어장을 증설 중이다.

석탄증산을 위해 갹 증설과 새탄광을 개발하고, 전력부문에서는 중소형발전소의 대대적인 건설 및 대규모 수력발전소 건설을 재개하였다. 산소열법용광로가 건설되었고 기존의 체철소를 정비·보수하고 있다. 화학비료 및 유기질 비료 생산에 힘쓰고 있으며, 특히 수많은 소금정제공장을 건설하였다. 그러나 경공업을 위시

66) 통일부, 「주간북한동향」 1998년, 1999년 각호 참조.

한 기타 부문에서는 두드러진 추진실적이 드러나지 않았다. 북한이 언급하지 않고 있는 대외무역은 최저수준에 도달하였다.

가. 국토관리·건설부문

(1) 국토관리

[국토관리] 1998년부터 북한은 종전의 식수월간(4~5월, 10~11월)을 국토환경보호월간으로 바꾸고 국토관리사업을 통해 추수이후 농한기 유휴인력을 이용하여 주로 식수 및 도로·하천 정리, 제방 보수 등에 주력하고 있다. 북한은 1998년도의 성과(나무모발조성 7,750여정보, 식수 8억9,715만그루, 도로건설 480여km, 하천보수 420여km, 해안방조제 보수 600여km, 비탈밭 및 폐기밭 규격화 5만2,260여정보)를 과시하고 「제2의 천리마대진군」을 통해 국토환경보호사업에서의 새로운 전환과 국토관리부문의 역량강화를 주장하였다. 1999년 봄철 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는 5억8,000만그루의 식수, 6,700여km의 도로와 1,600km의 강과 하천 정리, 9,800여정보의 토지정리, 1,200여정보의 새땅 개간, 1,200여km의 생울타리 조성, 500여정보의 양어장 보수 등을 하였다.

[토지정리] 1998년 7월 김정일의 대자연개조 구상에 따라 10월 시작된 총 3만여정보에 달하는 강원도 토지정리사업은 1단계 2만여정보의 토지정리가 1998년 말에 끝나고 나머지 1만여정보에 대한 2단계 사업은 1999년 4월 완료하였다. 1999년에는 총 5만5,000여정보에 달하는 평안북도 토지정리사업이 10월부터 시작되어 진행중이다. 또한 평안남도 개천시 대각리~남포시 강서구역 태성호간 관개수로 건설 착공식을 개최(11월)하였다. 북한은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

한 조치의 일환으로 전군중적 운동 차원에서 토지정리사업과 함께 영농기반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 건설부문

[도로] 1998년 북한은 개성시의 주요 도로에 대한 정비사업을 실시하였다. 함경북도 염분진~칠보산간 새도로(총연장 90여km, 노폭 9~13m)와 칠보산 탐승도로(9.9km)도 건설되었다. 북한은 1998년 11월 18일 쾨기모임을 시작으로 전국의 청년건설자들을 동원하여 평양~남포간 새고속도로(총길이 46.3km, 차도폭 48m의 12차선) 건설에 착공하였다. 평양~남포고속도로 건설은 1999년 공동사설에서 제기된 주요 건설대상으로 2000년 10월 10일에 맞이할 조선노동당 창건 55돌을 지향하여 진행되고 있다. 1999년에는 황해남도 재령군의 남호리별제방선 율환도로와 장수산 유원지도로(약 20km) 개통(1월), 흑돌령도로 착공(1월, 함남 정평군), 개성시~영통사간 순환도로 완공(6월), 해주~용당간(6.4km) 도로를 개건·확장 개통(10월), 나진~선봉 사이 주요도로를 확장·정비중이며 평양~남포고속도로와 관련 운영도로 건설이 진행중이다.

[철도] 1998년 북한은 해주~용진(용진선, 40.4km), 신강령~부포(부포선, 20km)간 협궤철로를 광궤화하는 공사를 완료(8월)하고 시운전 열차를 운행하였다. 11월에 함북도당위원회 지도하에 청진시 궤도전차화 공사가 착공 8년만에 일부구간 공사가 완공단계에 들어서는 등 궤도화공사를 서두르고 있다. 1999년에는 함흥~마전간 협궤철도 전기화 공사가 착공(3월)되었고 남청진~사봉 사이의 궤도전차화 2단계공사가 완공단계에 있다.

[통신] 1998년에 북한은 전국 50개 시·군에 광섬유통신망을 보장·신

설키로 했으며, 9월말까지 36개 시·군의 공사를 완료하였다. 1997년 말까지 70여개의 시·군과 단위에 전화 자동화를 실현했다고 밝힌 바 있어,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지금까지 100여개 시·군의 통신망이 현대화된 것이다. 1999년 2월 평양~신의주, 신의주와 평북도내 16개 시군 및 3개 노동자구 사이의 400km에 달하는 광섬유케이블공사 및 전화자동화공사를 완료하였다.

[평양 신시가지] 평양시 건설사업은 1997년 8월 “평양시를 웅장화하려 하게 건설하여 공화국 창건 50돌을 빛나게 장식하라”는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도시경영절(9.5)을 계기로 평양시 건설을 힘있게 벌이기 위한 건설자들과 평양시 근로자들의 궤기모임을 개최하고 동 사업을 착수하였다. 공화국 창건 50주년 기념일(1998.9.9) 이내에 완료할 것을 목표로 전당·전군·전민을 총동원하여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북한의 역점적 건설사업인 평양시 건설사업은 임흥로타리~신미동간 도로건설과 1만세대 주택건설을 비롯, 4.25여관, 4.25회관, 4.25영화촬영소, 구강종합병원, 야외수영장 등의 사회문화시설물들을 금수산기념궁전~형제산구역(약 8km) 구간의 주변에 건설하는 것이다. 1998년에 연건평 13만 4,000여평방미터에 2만명의 수용능력을 가진 4.25여관은 건설이 완료되어 준공식이 개최(9.29)되었다.

[주택] 북한은 1998년에 50여개의 시·군 소재지들과 630여개의 농촌부락에 1만1,400여세대의 살림집들과 1,480여동의 공공건물을 건설하였다고 하였다. 주요 주택건설 실적은 황해남도 6,800여세대, 평양시 2,000세대, 자강도 1,200세대 등으로 3개지역이 신규 주택건설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기타] 1998년에 자강도 강계기와공장(기와 생산능력 연 300만매)이 조업(8월)에 들어갔으며 1999년에는 남포지구에 대외무역기지로 대홍향 부두(8만여평방미터 부지)가 건설되어 조업(9월)하였다.

나. 농수축산부문

(1) 농업부문

북한은 대내적으로 이모작, 종자문제 해결 등의 방법과 감자 증산, 토지정리사업 전개 등을 통해 식량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대외적으로는 식량난을 호소하면서 해외로부터 식량 및 농업기술, 영농자재, 품종개량 등에 대한 지원과 협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미 1995년부터 북한은 국제기구로부터 상당량의 식량지원을 받아왔다. 북한은 농사에 전국가적인 힘을 경주해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1999년 신년사에서 북한은 농업생산이 강성대국 건설의 천하지대본이라고 강조하면서 주요 과업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먹는 문제 해결, 감자농사에서의 혁명, 적기적작·적지적작(適期適作·適地適作) 원칙에서 농업구조 개선, 두벌농사 및 종자혁명 계속 추진, 토지정리사업의 전군증적 운동 전개 등을 제시하였다.

FAO/WFP 특별보고서는 북한의 이모작 재배면적을 1997년의 3만7,000ha에서 1998년에는 7만5,000ha로 확대하여 17.5만톤의 수확을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향후 15만ha까지 그 재배면적을 확대시킬 계획에 있다고 보고하였다. 1998년의 경우 총 12만정보에서 20만2,000톤의 밀·보리를 생산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정일은 양강도 대흥단군 현지도(1998.10.1)시 "감자·고구마 생산에서 획기적 전환을 일으킬 것"을 지시한 이후 북한은 대대적인 감자 재배를 위해 1999년도에는 전국의 감자재배면적을 1998년보다 2배로 늘리는 한편 다수확 품종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해 왔다. 감자재배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각지에 감자 전문농장, 작업반, 분조 등의 감자농사시범단위들도 운영하고 있

다.⁶⁷⁾ 동시에 농업성 주관하에 감자농사작전을 수립하고 대대적인 감자증산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1998년도 북한의 감자 재배면적은 5만6,000정보, 생산량은 15만4,000톤(알곡 환산비율인 4:1)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1999년에 감자재배면적을 1998년보다 4만 3,000여정보 확대하고 2002년까지 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북한의 감자증산운동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1999년 감자생산량은 재배면적 10여만정보에서 약 30만톤 내외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⁶⁸⁾

농업생산과 관련하여 김영숙 농업부상은 FAO총회 기조연설(1999.11.16)을 통해 북한의 곡물생산량(조곡 기준)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1999년도 곡물생산량은 1998년의 283만톤보다 1.4배 늘어난 428만톤이지만 2000년에도 약 120만톤의 식량부족이 예상되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정곡 기준시 북한 발표(342.4만톤) 곡물생산량은 대북지원을 호소하고 있는 FAO/WFP 합동평가조사단의 평가 결과(347.2만톤)와 별로 다를 바 없다. 곡물생산이 1998년보다 대폭 증가한 것은 경제회생의 가능성과 북한주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의욕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축산부문

북한은 식량난 타개책의 일환으로 곡물사료가 필요 없는 토끼·염소 등 초식동물의 사육을 장려하고 있다. 이런 축산장려 방침에 따라 1998년에는 각지 37개 시·군들은 각각 1만마리 이상의 염소를 사육하

67) 「민주조선」, 1999.1.22.

68) 국제식량농업기구(FAO)의 자료에 따르면 1998년도 북한의 감자재배 면적은 4만8천ha, 총생산량은 51만톤으로 단위면적당 수확량은 10.6만톤으로 평가되고 있다. 「조선신보」, 1999.2.2.

게 되었다. 국가과학원에서 적은 알곡먹이로 고기생산을 늘릴 수 있는 새로운 가축용 「섬유질 발효먹이」 생산법을 개발하고 전국 각지의 축산부문에 이 먹이의 생산방법을 활발히 보급하였다. 경공업과 학분원에서는 10여종의 염소젖 가공제품을 새로 개발하고 그 가공기술을 북한 전역에 보급하였다. 개마고원 노홍협동농장(양강도 풍서군 소재)에 2,337정보 규모의 염소촌(염소목장)을 조성(8월)되고 이어 평양타조목장(연건평 20,000㎡, 타조우리 920여㎡, 타조놀이장 1만 2,900㎡, 기타 생산 및 보조건물)이 조성(9월)되었다.

1999년에는 평양시 형제산구역 신미리에서 연풍관리국 타조목장 1단계 공사 준공식(4월)을 진행하였다. 착공 7개월만에 1단계 준공을 하게된 이 타조목장은 연건평 45,000㎡로 타조의 사육관리를 비롯한 전반적 생산지휘를 컴퓨터화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김정일은 송암명기 소목장을 현지지도(4월)하는 등 최근 소·염소 등 풀먹는 집짐승 사육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토끼협회 발족(7월), 김정일의 초식동물 사육 전군중적 운동 전개 지시(8월), 각 도의 토끼기르기 열성자회의 개최(10월), 전국토끼사양부문 과학기술발표회 개최(10월), 전국 토끼기르기 경험 토론회 및 품평회 개최(10월)하는 등 토끼 사육에도 힘쓰고 있다.

(3) 수산부문

1997년 6월 김정일이 황해남도 용연군을 시찰하면서 양어사업을 집중적으로 발전시킬 것을 지시한 이래 북한은 과학원 수산과학분원 산하 양어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양식어종을 개발, 보급하는 운동을 벌이는 등 양어장 보수 및 건설에 치중해 왔다. 동시에 「수산자원조성과 보호 및 단속에 관한 규정」(1997.7), 「물자원법」(1997.8), 「바다

오염방지법」(1997.12) 등 관련 법규를 연이어 제정하였다. 1998년에 평남도 은천군 행정경제위원회는 수자원 보호대책과 수산자원 증식 사업을 벌였고 양강도내 공장·기업소들은 164개소에 총 40정보 규모의 양어장을 건설하였으며 개성시와 배천군에서는 6정보의 양어장을 건설 및 보수하였다.

1999년 3월에는 어부절을 맞아 동·서해의 수산사업소와 연안 양식 사업소에서 수산물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고 하였다. 신포·통천·삼호·양화·홍원·송도원·원산 등 동해지구 수산사업소에서는 세소어업 또는 심해어업으로 수산물 생산을 늘이고 있고 운전·한천·정주·곽산 등 서해지구 수산사업소들에서는 밀물, 썰물을 이용한 안강망 어업을 대대적으로 벌이면서 수산물 생산에서 새로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하였다. 양어법을 제정(3월)한 데 이어 김정일이 조선인민경비대 제 1216부대 양어장(5월), 나효진이 일하는 양어사업소 양어장(8월), 차주현이 일하는 양어사업소 양어장(8월)을 잇달아 방문하면서 양어사업을 전군중적 운동으로 전개해 나갈 것을 지시하였다.

(4) 임업

북한은 1998년 봄철 나무심기 월간을 이용하여 나무심기 쫓기모임을 잇달아 개최하고, 식수절 51주년(4.6)을 맞아 잣나무, 아카시아 등 빨리 자라고 경제성 있는 나무들을 많이 심도록 촉구하였다. 3월에 1,200여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국토관리와 녹화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고 4월에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하였다. 위원 임산사업소와 천내 임산사업소가 최근 한달 동안 통나무를 계획보다 초과 생산했다고 한 직후인 8월에는 임업노동자절(8.10)을 맞아 임업부 국장 조성국이 임업부문 일꾼·노동계급이 당의 임업정책 관철에서 제기되는 문

제를 자체로 풀어가면서 생산을 늘려나가고 있다고 하였다. 가을철 국토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식수사업을 추진하여 사업기간동안 3억268만그루의 나무를 심었다고 하였다.

1999년 북한은 총 15만 5,400여ha 산림조성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사업은 도시경영성과 국토환경보호성 주관으로 시행되며 주로 섬유제지림·유지림(油脂林) 등 인민생활 향상과 경제발전에 필요한 나무를 많이 심을 계획이다. 한편 최종건 도시경영 및 국토환경보호성은 식수절(3.2)을 맞아 1999년에 10만3,500ha에 6억6,500여만 그루의 식수목표를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식수계획의 차이는 도시경영 및 국토환경보호성이 도시경영성과 국토환경보호성으로 분리됨에 따라 식수목표를 재조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 광공업부문

(1) 광업부문

1998년 연초 석탄공업부 부부장 김종근은 석탄생산목표를 하루 8만톤으로 설정하고, 구체적으로 60개의 북창지구 채탄장에서 29개의 갱을 더 찾아 89개로 확대하며 남양탄광에 100만톤 생산능력 확장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하루 8만톤 석탄생산을 위해서는 갱을 100개 이상 늘려 540여개의 갱을 640~670개로 증가시키기로 하였다. 1998년에 중부 동해연선에서 유색금속 광물생산기지인 고원광산을 새로 개발·조업하였다. 순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는 석탄 100만톤 증산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순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는 2.8직동청년탄광 11갱, 13갱 건설이 마지막 단계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20여개의 새 구역 조업준비도 앞당겨 끝낼 수 있게 되었다.

북한은 유엔개발계획(UNDP) 지원하에 안주지구채굴공학연구소 강화대상 조업식(1998.8.27)을 현지에서 가졌다. 북창지구탄광연합기업소(평남 북창군 소재)는 인민군이 대거 동원되어 노후시설들을 보수정비하고 매장량 100여만톤의 확보 탄량을 조성하는 등 석탄생산능력을 확장하였다. 개성시에서는 4갱의 초무연탄(超無煙炭) 탄광을 건설하였다. 1999년에 12월5일청년광산(평북도 소재)이 개발을 완료하고 조업(4.23)에 들어갔다.

(2) 공업부문

[전력공업] 공업부문에서 북한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분야는 전력공업이다. 북한은 극심한 에너지난 타개를 위해 1997년이래 중소형발전소 건설을 집중 추진하여 왔으며 1998년도 신년사에서조차 중소형발전소 건설을 전군중적 운동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북한은 지방전력의 자체수급을 목적으로 중소형발전소(소수력, 풍력, 대용연료, 기타발전소) 건설에 주력하고 있다. 1998년에 5,000여개를 건설한 데 이어 1999년에는 각 군별 지방산업공장에까지 전력 공급이 가능한 비교적 규모가 큰 발전소 위주로 700여개의 중소형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김정일의 태천수력발전종합기업소 현지지도(1999.1.18) 이래 그동안 부진했던 대규모 수력발전소의 건설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정책상의 변화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력부문사업방향과 관련하여 김기욱(전기석탄공업성 동력자원개발국 국장)은 1999년에 10여개의 대형 수력발전소를 건설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1999년도 대규모 발전소 건설대상은 석탄지하가스화발전소, 남강발전소, 태천수력발전종합기업소, 안변청년발전소 2단계

건설공사 등이다. 북한은 1998년에 대규모발전소인 원산수력발전소 건설에 주력하였고, 1999년에 태천수력발전종합기업소 3호발전소 착공(2월), 금야강발전소(함남 금야군) 건설 재개, 예성강 수력발전소 착공(4월), 안주지구 석탄지하가스발생장과 가스발전소 준공(9월), 남강발전소(평양시 강동군 삼등지구)가 조업(10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최근 전력수요대책으로 화력발전용 석탄증산, 중소형발전소 건설, 발전소의 보수·정비를 강조하고 있다. 전력공업부 국장 김기옥은 1998년 7월 최근 평양화력, 수풍발전소 등 각지 수·화력발전소들이 설비의 보수·정비에 주력함으로써 전력생산이 정상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1999년부터 북한의 전력생산 방향은 화력발전에서 수력발전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전기석탄공업성 동력자원개발국 김기옥 국장은 「조선신보」와의 회견에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은 중단하고 기존능력 유지에 중점을 두겠다고 언급하였다.⁶⁹⁾

[기계공업] 1998년 6월 용성기계연합총국(함흥 소재)은 내부예비를 동원하여 수력발전용 터빈 1대를 생산하였고 5대의 수력터빈을 더 만들어 낼 목표 밑에 노력하고 있다. 신의주선박공장은 원양어업용 「만능고깃배」를 건조하였다. 김종태전기기관차종합기업소는 1998년에 들어와 이미 폐기되어 사용할 수 없는 기관차들을 개조한 ‘강행군호’ 전기기관차를 제작하였으며 1999년에도 ‘강행군호’와 ‘붉은기’ 전기기관차를 연이어 제작하고 있다. 1999년 승리자동차종합공장에서 승리-58-61형, 자주-64형 자동차를 새롭게 개조(2월)하였고 낙원기계연합기업소는 새로운 유압식 굴착기(포크레인, 굴착반경이 8.5m, 굴착깊이가 6.5m, 시간당 굴착능력이 100m³)를 제작(10월)하였다.

69) 「조선신보」, 1999.3.12.

[금속·제철공업] 1998년 금속 가공품과 주물품들을 생산·수출하는 북·중간 합작공장인 청진금속합작회사가 완공되어 조업식(4.16)을 가졌다. 1999년에는 황해제철연합기업소(연간 생산능력: 제철 113.4만 톤, 제강 114.5만 톤, 압연 74만 톤)에 산소열범용광로가 건설(2월)되었다. 이 산소열범용광로는 철광석과 함께 선철 생산에 투입되는 코크스의 일부를 석탄으로 대체하고, 산소주입을 통해 석탄을 연소시키는 미분탄취입기술을 채택한 용광로로 추정된다. 김책제철연합기업소(연간 생산능력 600만 톤; 제철 212.5만 톤, 제강 240만 톤, 압연 147만 톤)는 김정일의 함경남북도 공업부문 현지지도(3월)시 제시한 과업의 일환으로 설비를 대대적으로 정비·보수하였다.

[화학공업] 1998년 국가과학원 국가균주보관소에서 소출을 증대시키고 시비효과가 빠른 질소, 인, 칼리, 규소 복합미생물비료를 개발(1월), 전국적으로 보급하였다. 북한 최대의 화학섬유 생산공장인 평안남도 소재 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에서 복합미량원소비료 생산기술공정을 실정에 맞게 개선(8월)하였다. 조총련 상공인들의 지원을 받은 만경대 애국발효퇴비공장의 조업식(10.8)을 가졌고 흥남비료연합기업소(2만명 종업원, 연간 생산능력은 약 133만 톤(유안 40만 톤, 요소 18만 톤, 질안석회 35만 톤, 파인산석회 40만 톤) 농유산(濃硫酸) 생산공정 1단계 공사가 마감단계(11월)에 있다. 1999년에는 신의주화학종이연합기업소의 아류산(아황산)소다 생산기지 1단계 건설이 완공(1월)되고, 흥남비료연합기업소 및 함주애국복합미생물공장 등에서 비료생산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선전하였다. 흥남비료연합기업소는 대대적인 설비보수 및 생산공정 건설이 진행중이다.

1998년 김정일이 군인들이 건설한 광량만 정제소금공장 시찰(5월)시 "바다를 끼고 있는 모든 도들에서 자체의 힘으로 정제소금공장들을 많이 건설하라"고 지시한 이래 북한에서는 식용 및 공업용 소금

을 공급하기 위한 소금정제공장 건설이 대폭 증가하였다. 1998년에 광량만 정제소금공장(남포시 인근, 5월), 함흥정제소금공장(함흥시 마전지구, 8월) 착공(8월), 금야염전(함남 금야, 총 700여정보) 1단계(수백여정보) 공사 완료(7월) 및 2단계 공사 착수(10월), 충성의 신포정제소금공장(함남 신포시, 10월)이 완공·조업하였다. 1999년에는 남양제염소 정제소금공장(평남 숙천, 5월), 학소리 정제소금공장(평북 염주, 5월), 광명성제염소(함남 금야, 10월), 천내 정제소금공장(강원 천내, 10월), 연안 정제소금공장(함남 연안, 10월), 충성의 청진정제소금공장(함북 청진, 11월)이 준공·조업중이다. 황해북도 서해안의 용매도 간석지(황해남도 청단군 소재)에는 1단계 50정보의 염전 조성 공사를 완료(2월)하고 2단계 목표로 1999년 말까지 200정보 규모의 염전조성 공사를 진행중이다.

[전기·전자공업] 1998년 메아리음향사 제1단계 확장공사 준공식(6월)이 진행되었다. 메아리음향사는 1995년 4월 조총련의 지원으로 카세트 제작 등 종합음향기기 생산 공장(연건평 3,500㎡)으로 설립되었으며 조총련 상공인이 동 음향사의 명예사장으로 등용된 바 있다.

[경공업] 북한은 1998년 8월에 8·3인민소비품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직장·작업반·단위작업반·부업반·동·가내작업반 수는 4만 수천개에 달하며, 소비품 생산자 대열은 수만명으로 늘어났다고 하였다. 그러나 생산단위는 1996년 4만8,000여개, 1997년 4만3,000여개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어 최근에 와서 감소된 것으로 보인다. 1998년 평양피복공장은 피복가공시 나오는 폐설물(가위밥 등)을 재활용하여 솜을 생산하는 「솜재생종합기계」를 자체 제작(7월)하였다. 영광유리공장은 자체의 힘으로 판유리 생산공정을 갖추고 생산을 시작하였다.

1999년에 안주신발공장이 능력확장공사를 완공하고 조업(5월)하였으며, 소규모의 지방사업공장으로 추정되는 11월28일공장이 조업(6

월)하였다.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신의주화장품공장의 이전·건설을 위한 착공식이 남신의주에서 개최(11월)되었다. 이 공장은 생산능력 확충을 통해 화장품·비누·치약 등 일용품 생산증가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4) 무역부문

1990년대 들어와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북한의 대외무역은 1998년 또 한차례 격감하였다. 1998년도 북한의 대외무역규모는 1997년에 비해 33.7% 감소한 14.4억달러에 그쳐 1990년대에 들어와서 최저의 교역규모에 머물렀다. 하락폭에 있어서도 1991년 42.2%(1990년 47.2억달러에서 1991년 27.2억달러)의 감소율을 기록한 이래 최대로 나타났다. 1998년의 수출액은 5.6억달러로 1997년보다 38.2% 감소하였고 수입액은 30.6% 감소한 8.8억달러였다.

수출입구조를 살펴보면 수출의 경우 수산물, 광물 등 1차상품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수입의 경우 자본재 수입은 감소하고 체제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물자수입에 그치고 있다. 북한은 1998년 전체 수입에서 식량, 에너지 구입비중이 40.2%에 달하고 수출도 외화획득을 위한 1차상품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무역구조의 왜곡이 심화되었다. 원유 등 에너지 물자와 산업용 원부자재 수입감소로 그나마 북한수출을 지탱해 왔던 위탁가공산업마저 축소되고 있다. 북한의 무역구조는 부가가치 창출과는 거리가 먼 구조로 퇴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⁷⁰⁾

이렇게 북한의 무역규모가 축소된 것은 1997년에 대폭 증가하였던

7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북한뉴스레터」 (1999.6), p. 2.

환금목적의 금수출, 원유 임가공수출 등 특정분야의 교역이 지속되지 못하고 일회성에 그쳐 수출이 부진한데 원인이 있다. 북한은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지역에 편중된 교역구조로 인해 1998년 아시아지역의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제위기의 직접적 타격을 받게되었다.

북한은 최대교역상대국인 중국과의 교역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이것은 식량과 에너지의 주요 공급창구인 중국이 북한에 대해 기존의 무상원조 및 지원성 교류에서 상업적 베이스의 교역으로 전환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중국과의 변경소액무역 및 지원성 교류 등과 같은 기존의 거래방식에서 탈피하지 못한 채 정상적 거래패턴을 정착시키지 못하고 있다. 즉 북한이 중국과의 교역 감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도 원인이 되었다.

1999년 상반기 북한의 대외무역액은 1998년 같은 기간에 비해 12%가 줄어든 6.6억달러(수출은 11% 감소한 2.3억달러, 수입은 12.6% 감소한 4.3억달러)로 잠정 집계되었다.⁷¹⁾ 이런 추세라면 1999년도 대외무역규모는 1998년보다 소폭 감소한 14억달러 내외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1999년 상반기에는 원유, 석유, 석탄 등 에너지자원의 수입이 대폭 증가하고 식량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동안 북한의 최대 교역상대국이었던 중국이 근소한 차이로 일본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중국으로부터 식량수입이 대폭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중국, 일본 등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무역규모는 감소한 반면 홍콩, 인도, 싱가포르 등 아시아권 국가들과의 교역량은 증가하고 있어 북한이 이들 국가와의 경제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71) 대한투자무역진흥공사, 「북한뉴스레터」 (1999.10), pp. 1~8.

4. 1998~99년 경제의 종합평가

북한은 1998년에 이어 1999년에도 강성대국 건설에서 중요한 부문인 농업과 기간산업부문에 대해 국가예산을 증액 편성하였다. 그리고 수많은 공장·기업소가 생산계획을 초과 달성하고 있다고 선전하였다. 동시에 1999년에 들어와서 경제활동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부각시키면서 경제가 회복기에 들어갔음을 주장하고 있다.

1998년 북한경제는 농업생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부문이 위축되었기 때문에 미미한 정도이지만 마이너스 성장에 머무르고 말았다. 1999년에는 곡물생산의 증가, 에너지 문제의 개선 등으로 경제상황이 다소 호전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대외무역은 1998년에 이어 최저수준이 예상된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지원없이 자체적으로 경제난을 해결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가. 북한의 성과보도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10기 2차회의(1999.4.7~9)에서 「1998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1999년 국가예산에 대하여」라는 의안을 채택하였다. 여기에서 북한은 1998년도에 당의 농업, 전력공업, 석탄공업, 금속공업, 철도운수를 추켜세우고 중공업을 기반으로 하는 자립경제의 위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을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중요과업으로 제시하고 이 부문에 국가예산 자금을 집중 배분하였음을 밝혔다. 1998년도의 예산수입은 1997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0.4% 증가)이지만 전력공업, 석탄공업, 금속공업, 기계공업과 철도운수부문에 대한 자금지출은 1997년보다 6% 증가하였다.

한편 1999년도 국가예산도 강성대국건설에서 전환을 이룩하는데서

중요한 부문들에 재정자원을 집중하는 방향에서 편성하였다. 1999년 세입과 세출총액은 각각 203억8,172만 원(93억9,000만달러 상당)으로 1998년 대비 세입은 3%, 세출은 1.8% 증가하였다. 인민경제비는 1998년 대비 2% 증가하였지만 이중에서 가장 큰 몫을 전력부문과 농업부문에 지원키로 하였다. 농사제일주의 방침의 요구에 맞게 농업 부문에 대한 투자를 1998년 대비 11% 늘리고, 동력기지 확대강화를 위해 전력부문에는 15% 증액하였다. 또한 석탄공업, 광업, 금속·기계 공업을 비롯한 기간공업부문과 철도운수부문에는 10% 증액하였다.

북한의 공장·기업소 1998년 상반기 계획 완수 보도에 따르면 계획 완수 공장·기업소의 수가 1997년 같은 기간에 비해 3배이상 증가하였다. 1999년들어 경제회복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월, 분기, 반기 등 공장·기업소의 계획 초과달성을 선전하고 있다. 1999년 상반기 중에는 2,500여개 공장·기업소들이 계획을 초과 달성하였으며 1998년 같은 기간 대비 전력생산 1.4배, 석탄생산 1.1배 증가하였다고 보도하였다.⁷²⁾ 상업절(9.15)을 맞아 상업성 부상 김봉철은 상반기 국가상품유통액 계획을 전년 같은 기간보다 높이 수행하여 국가예산납부계획은 20%, 공업생산계획은 7% 초과 달성했음을 전하고 있다.

동시에 북한은 1999년 3/4분기의 생산성과를 대대적으로 선전하였다. 3/4분기 공업생산은 1998년 같은 기간 대비 9% 증가하였으며, 이 중 전력부문 9%, 금속부문에서 선철 7% 및 압연강재 40%, 철도부문의 화물수송량 70%, 기계부문의 공작기계 생산이 16% 증가하였다. 금속부문의 생산증가는 코크스 도입량 증가 및 주요 제철소(천리마 제강연합기업소, 김책제철연합기업소, 황해제철연합기업소)의 정비·보수 등에 힘입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수평분층식 채탄방법을 도입하고 있는 석탄부문에서는 생산을 늘이고 있다고만 언급하였고, 기

72) 「민주조선」, 1999.7.17.

계부문에서는 공장·기업소들의 생산이 점차 자기 궤도에 진입한다고 하였으며, 경공업부문에서는 주민들에게 소비품을 더 많이 보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을 뿐이다.

북한은 최근 경제회복에 자신감을 보이면서 1999년에 들어와서 경제활동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부각시키고 있다. 백남순 외무상은 각국 외무장관과의 개별회담(1999.9.20~24)에서 ‘북한 경제가 올해부터 회복기에 들어섰다’고 하였다.⁷³⁾ 이어 「인민일보」 평양특파원과의 인터뷰에서는 경제에 전면적 전기가 마련되었고, 수천개 공장·기업소의 생산이 정상화되었으며 상반기 공업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하였다고 주장하였다.⁷⁴⁾ 이에 앞서 북한의 「조선중앙방송」도 “나라의 경제가 활성화 궤도에 들어섰다”고 언급한 바 있다.⁷⁵⁾

나. 1998~99년 경제실적 평가

1998년 북한의 경제규모(명목GNP 기준)는 126억달러이고 1인당 GNP는 573달러로 1997년에 비해 대폭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은행이 북한의 경제규모를 한국 원화 기준으로 추정하고 있고 1998년경제위기 상황에서 한국 원화의 대미달러 환율이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1998년 북한의 경제성장률(실질GNP 기준)은 -1.1%로 1990년대 들어 가장 낮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농림어업부문에서는 4.2%의 플러스 성장을 보였으나 광공업부문에서는 여전히 마이너스

73) 북한의 백남순 외무상은 제54차 유엔총회 기간(9.17~28, 뉴욕)에 18개국 외무장관과 회담을 가졌으며 유엔총회의 기초연설(9.25)에서도 북한경제의 회복을 언급하였다.

74) 「인민일보」, 1999.10.6.

75) 「조선중앙방송」, 1999.7.27.

성장(-4.1%)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제조업부문은 -3.3% 성장을 기록함으로써 1990년대 들어 완창기와 비교할 때 가장 낮은 수치이다.

1999년에도 경제상황이 크게 호전되지는 않았지만 국내외 북한경제 전문가들이 최근 북한경제가 바닥을 쳤다는 분석을 잇달아 내놓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경제가 최저점은 통과한 것으로 보인다.⁷⁶⁾ 국제사회의 지원과 곡물생산 증가, 다소 호전된 에너지 수급사정 등에 힘입어 소폭의 플러스 성장으로 반전될 가능성도 있다. 다소 상황이 나아지고 있는 부문은 농업 및 건설부문이며, 에너지부문(석탄생산)은 1999년부터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곡물생산은 1998년 388.6만톤으로 1997년 대비 40만톤 정도 증산되었으며, 1999년에도 농업구조개선 정책(이모작 확대, 품종개량, 감자재배 활성화, 토지정리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고 비교적 양호한 기상조건 및 국제사회의 비료·농자재 지원 등에 힘입어 증산이 예상된다.⁷⁷⁾

경제사업 관련 건설실적은 1997년 20건, 1998년 36건, 1999년 상반기 기준 39건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1999년 상반기 경제건설 실적은 건수면에서 1998년 상반기 13건에 비해 3배 증가하였다. 특히 1998년 하반기부터 평양~남포고속도로, 강원도 토지정리사업 등과 같은 중대규모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북한의 석탄생산량은 1997년 2,060만톤에서 1998년 1,860만톤으로

76) 미국의 찰스 카트만 한반도 평화회담 특사는 아시아 소사이어티 주최 세미나(1999.5)에서 “북한경제가 몇 달전부터 바닥을 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였다.

77) FAO/WFP의 평가(잠정)에 따르면 1999년 북한의 곡물생산은 347.2만톤으로 1998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도 북한의 쌀생산은 14% 증가하였지만 옥수수 생산은 30% 감소하였다. 쌀 생산 증가는 비료공급의 증가와 비교적 물공급이 양호했기 때문이며, 반면에 옥수수 생산 감소는 상당규모의 재배면적 감소와 강수량 부족에 기인한다. FAO/WFP, Special Report: FAO/WFP Crop and Food Suppl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1999.11.8.

감소하였고 발전량도 193억kWh에서 170억kWh로 줄어들었다. 원유 도입량(KEDO지원 중유 제외)은 1997년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50만톤으로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다. 따라서 1998년에도 북한의 에너지 사정은 개선되지 않은 채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99년 석탄생산은 '수평분층식' 채탄방법 도입 및 '요동식 기계삽' 등 기자재 공급으로 생산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발전량도 석탄생산 증가와 중소형발전소 건설 등으로 증가가 예상된다. 1999년에는 증가가 예상된다. 특히 1999년 상반기에 원유, 석탄, 석유 등 에너지 자원의 수입이 대폭 증가했음을 감안한다면 1999년의 에너지 사정은 호전되고 있음이 분명하다.⁷⁸⁾

여타부문의 실적은 여전히 호전되지 않고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원자재의 생산은 1998년에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 철광석, 비철금속, 강철, 시멘트, 비료 등의 생산량은 각각 289만톤, 9.7만톤, 94.5만톤, 315만톤, 70만톤으로 1997년 대비 각각 2만톤, 1.1만톤, 7.1만톤, 19만톤, 7만톤 감소하였다. 그렇지만 1999년의 강철 생산량은 코크스 도입의 증가, 주요 제철소의 정비·보수 등에 힘입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무역부문에서는 완충기 이후 또 한번의 급감을 기록하였다. 최근 북한의 대외무역 감소는 아시아 금융위기로 인한 여건 변화와 무역상사 축소 등의 내적 조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누적된 경제난의 충격이 대외무역 부문에 파급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수해피해로 경제전반이 심각한 타격을 입은 1995~96년에도 북한의 무역액이 20억달러 선에 머물러 왔기 때문에 이 규모가 북한 대외무역의 최저한계로 평가되어 왔다.

7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북한뉴스레터」 (1999.10), p. 8.

그러나 1998년 대외무역액이 15억달러에도 미치지 않게 됨으로써 북한경제는 최악의 상황에 도달하게 되었다.

<표 9> 정부차원의 대북지원 (1999.1~11)

(단위: 만톤)

구 분	식 량				코크스	비료	중유
	미국	중국	EU	합계			
지원국	미국	중국	EU	합계	중국	한국	KEDO
규 모	60	15	8.9	83.9	40	11.5	50

자료: 통일부.

북한은 식량, 에너지난 극복을 위해 물자도입에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현단계에서 이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국제기구 등 외부로부터의 지원이 절박한 실정이다. 1999년(1~11월) 북한은 식량 83.9만톤, 코크스 40만톤, 비료 11.5만톤을 미국, 중국 등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다.

V. 맺음말

북한은 강성대국론을 주장하면서 김정일시대의 새로운 목표를 대내외에 선언하였다. 김일성 사후 북한은 새로운 경제정책을 제시하지 않고 완충기의 경제전략인 3대제일주의를 답습하였다. 그러나 지금 북한은 강성대국 건설을 내세우면서 김일성시대와는 구별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강성대국 건설은 공식적으로 1998년 8월 <강성대국>이 발표된 이후 시작되는 것이지만 강성대국 건설에서 제기되는 경제정책 방향은 그 이전에 나타나고 있었다.

1998년 신년 공동사설은 완충기의 신년사와는 경제정책의 운용과 내용면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98년을 기점으로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는 3대제일주의 관철에서 먹는 문제의 해결과 선행부문의 정상화로 전환되었고, 또한 경제방침이 보다 구체화되고 실천적인 면이 강조되고 있다. 1999년 신년사에서는 이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하면서 아울러 실리를 추구하겠다는 양면성을 가진 경제관이 등장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강성대국 건설은 이미 1998년 초부터 진행되어 왔으며 <강성대국> 발표와 함께 공식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제3차 7개년계획이 실패로 끝나고 식량 및 소비재 부족으로 인한 주민불만 증대가 권력승계 및 체제수호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 경공업 및 무역 육성을 통해 주민생활수준 향상 및 수출증대를 도모하려 하였다. 동시에 중공업우선정책에 따른 산업구조 불균형이 경제회복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3대제일주의를 관철함으로써 이를 시정해 나가고자 하였다.

그러나 3대제일주의하에서도 경제위기는 심화되고 1994년 말부터 심각한 식량난이 발생하자 북한은 어려운 경제현실과 타협하는 방향으로 경제를 운용하고자 하였다. 공식적인 생산체계 및 배급체계가 와해된 상태에서 주민들의 자구적인 경제활동을 용인할 수밖에 없었으며 농업부문에는 '새로운 분조관리제'를 실시하고 나진·선봉지대에 대해서는 제한적이지만 시장경제요소를 도입하였다.

완충기 동안 3대제일주의의 시행과 부분적인 구조조정(개혁조치)들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채 오히려 경제난은 심화되었다. 식량 및 생필품 부족, 산업 각부문의 물자부족 심화로 경제활동은 극도로 위축되었고, 이런 부족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공장·기업소 및 주민들의 자구활동 증대로 계획경제부문의 위축과 비공식부문의 확산이 급속히 진전되었다. 따라서 북한은 1997년 10월 김정일의 당총비서 취임을 계기로 완충기 경제정책의 실패를 거울삼아 이완된 사회주의 계획경제질서를 재확립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시도를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 방침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강화와 변화된 현실 수용 및 실리추구로 요약될 수 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강화하기 위해 자력갱생, 자립적 민족경제건설 및 중공업우선정책을 강조함과 동시에 국가의 중앙집권적, 통일적 지도를 내세우고, 개혁·개방을 거부하면서 자본주의적 요소의 침투를 경계하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은 변화된 현실의 일부를 수용함으로써 주민들의 불만을 완화하고 주어진 조건과 환경에 맞게 실리 위주의 경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계획경제부문의 정상화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북한은 자력갱생에 의한 내부예비를 총동원하는 수단으로 「제2의 천리마대진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김

정일의 경제부문에 대한 현지도도를 통해 강성대국 건설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와 같이 강성대국 건설 방식은 김정일이 현지도시 제기한 과업을 인민들이 「제2의 천리마대진군」을 통해 철저히 수행하는 것이다.

북한은 강성대국 건설의 선차적인 목표로 먹는 문제의 해결과 선행부문의 생산정상화를 내세우고 있다. 먹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농업부문에서 이모작, 감자증산 및 토지정리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풀먹는 짐승사육과 양어사업을 전군중적 운동으로 전개하고 있다. 선행(기간)산업부문의 생산정상화를 위해서는 특히 에너지 증산을 최우선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석탄증산을 위해 갱 증설과 새 탄광을 개발하고, 전력부문에서는 중소형발전소의 대대적인 건설 및 대규모 수력발전소 건설에 주력하고 있다. 북한은 1998년에 이어 1999년에도 강성대국 건설에서 중요한 부문인 농업과 기간산업부문에 대해 국가예산을 증액 편성하였다.

북한은 1999년에 들어와서 경제활동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부각시키면서 경제가 회복기에 들어갔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곡물생산의 증가, 에너지 문제의 개선 등을 통해 볼 때 어느 정도 뒷받침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경제상황 호전의 조짐이 강성대국 건설에 따른 경제정책의 변화에서 기인한다고 단정짓기는 시기상조인 것 같다. 북한은 자체 노력과 함께 국제사회의 지원을 통해 경제난을 완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경제정책의 성격은 '보수적 실용주의'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강성대국 건설을 통해 완충기 경제후퇴의 과정에서 나타난 이완된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복원하고 동시에 이미 변화된 경제현실은 수용하면서 실리를 추구하고자 하

기 때문이다. 이러한 북한 경제정책의 양면성, 즉 ‘보수적 실용주의’는 지난 시기의 정책적 실패에 대한 반성과 개혁·개방의 비용과 편익에 대한 계산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내부 통제를 강화하면서 실리가 큰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개방을 추진하고 경제체제 개혁은 현실을 수용하는 정도의 최소한에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강성대국 건설의 성공여부는 외부의 경제지원과 같은 실리추구를 제대로 이끌어낼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북한이 체제수호에 몰두하면서 소극적인 개혁·개방에 머무른다면 경제회생에 필요한 수준의 실리를 외부로부터 획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금강산관광사업처럼 북한에게 반대급부를 거의 요구하지 않고 막대한 외화를 제공하는 사업을 북한이 계속 기대할 수는 없다.

북한의 최대 현안은 경제회생과 체제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며 ‘보수적 실용주의’는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다. ‘보수적 실용주의’하에서 북한은 보다 유연하게 경제를 운용해 나갈 것이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농업부문의 실질적인 농가책임제,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외화획득, 경제특구의 다양화 및 특화, 주변국과의 협력하에 기존 중공업시설 복구, 수출증대를 위한 생산단위의 대외무역 분권화, 소비재유통부문 확충 등이다.

이렇게 한다면 비록 북한이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공개적으로 개혁·개방을 거부하고 자립경제노선 추구를 주축으로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고수하더라도 실질적인 개혁·개방이 대내외적으로 추진됨으로써 경제회생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경제사전(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서재진. 「또 하나의 북한사회」. 서울: 나남출판, 1995.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각년도.

2. 논문

김달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대외무역을 더욱 발전시키자.” 「근로자」, 1989년 9월호. 평양: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1989.

김일성. “사회주의 농촌 테제의 기치 높이 농촌 문제의 종국적 해결을 위하여(1994.2).” 「김일성저작집 4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김일성. “현 시기 정무원앞에 나서는 중심과업에 대하여(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 연합회의에서 한 연설, 1992.12.14).” 「김일성저작집 4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리기성.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신년사에서 제기하신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완충기와 우리 당의 혁명적 경제 전략.” 「경제연구」, 1994년 1월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4.

리신효. “새로운 무역체계의 본질적 특성과 그 우월성.” 「경제연구」, 1992년 4월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2.

- 서성준.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 로선은 자주적인 대외 무역 관계 발전을 위한 물질적 담보.” 『경제연구』 1996년 1월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6.
- 서승환. “경공업제일주의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 것은 현시기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나서는 중요 전략적 과업.” 『경제연구』 1994년 2월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4.
- 송인택.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는 사회주의경제관리원칙들을 철저히 구현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 농업지도체계.” 『경제연구』 1995년 1월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5.
- 윤원진. “국영농목장 독립채산제 조직형태.” 『경제연구』 1995년 1월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5.
- 임강택. “김정일체제와 북한의 경제정책.” 『북한연구학회보』, 제3권 제1호 (1999).
- 조강일. “무역제일주의방침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일대양양을 일으키게 하는 혁명적방침.” 『경제연구』 1994년 2월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4.
- 최경희. “현 시기 대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방도.” 『경제연구』 1995년 2월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5.
- 최명규. “농촌경리에 직접 복무하는 국가기업소를 창설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 것은 사회주의 농촌건설의 합법칙적 요구.” 『경제연구』 1994년 1월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4.
- 최영욱. “현시기 우리 당이 제시한 무역정책과 그 정당성.” 『경제연구』 1997년 2월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7.
- 최인덕. “균중적운동으로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이기 위한 당위원회 조직정치사업.” 『근로자』 1990년 1월호. 평양: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1990.

한총석. “농업제일주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 것은 당의 혁명적 경제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 요구.” 「경제연구」 1994년 2월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4.

한태홍. “군 지방경제의 종합적 발전과 인민생활의 향상.” 「경제연구」 1995년 1월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5.

3. 기 타

「북한뉴스레터」.

「동아일보」.

「로동신문」.

「민주조선」.

「조선신보」.

「한겨레신문」.

「한국경제신문」.

「주간북한동향」.

「내외통신」.

「중앙일보」.

「조선중앙방송」

「교도통신」.

「월간조선」.

「인민일보」.

「중앙방송」.

FAO/WFP. *“FAO/WFP Crop and Food Supply Assessment Mission to the DPRK.”* Special Report.

The People's Korea.

최근 발간자료 안내

■ 연구보고서

96-01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 연구	최진욱	저	6,000원
96-02	통일과정에서 매스미디어의 역할	이우영	저	6,000원
96-03	동·서독 인적교류 실태 연구	김학성	저	6,500원
96-04	동서독간 정치통합 연구	황병덕	저	6,000원
96-05	남북한 환경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다자적·양자적 접근	손기웅	저	7,000원
96-06	북한과 주변4국의 군사관계	정영태	저	6,000원
96-07	한·미 안보협력 증진방안 연구	김국신	저	4,000원
96-08	동북아 평화체제 조성방안	여인곤·김영춘·신상진의 공저		10,000원
96-09	북한 경제개혁의 최적방안 연구	오승렬	저	6,500원
96-10	통일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역할	조민	저	5,000원
96-1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의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저	5,000원
96-13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제성호	저	5,500원
96-14	북한 사회의 계급갈등 연구	서재진	저	7,500원
96-15	통일과정에서의 정당역할 연구	김도태	저	4,500원

96-16	KEDO체제하에서 남북한 협력증진에 관한 연구	전성훈	저	5,000원
96-17	남북한 에너지분야 협력방안 연구	박순성	저	4,000원
96-18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박종철·김영운·이우영	공저	7,000원
96-19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허문영	저	5,500원
96-20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와 남북한 관계	김규륜	저	3,500원
96-21	북한의 노동정책과 노동력 평가	남궁영	저	6,000원
96-22	한·러 안보협력 방안 연구	강원식	저	8,500원
96-23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	김성철·정영태·오승렬의	공저	8,500원
96-24	북한체제의 변화주도세력 연구	이교덕	저	4,500원
96-25	북한의 농업정책과 식량문제 연구	최수영	저	4,000원
96-26	북·미관계 개선과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 전망	이헌경	저	6,500원
96-27	한·일 안보협력방안 연구	전동진	저	4,500원
96-28	북한의 유일체제와 정책경쟁	안인혜	저	5,500원
96-29	한·중 안보협력방안 연구	최춘흠	저	3,500원
97-01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	강원식	저	5,000원
97-02	북·일수교와 남북한 관계	이교덕	저	3,500원
97-03	경수로인력의 북한체류시 법적 문제	제성호	저	7,000원
97-04	중·북관계 전망: 미·북관계와 관련하여	신상진	저	4,000원

97-05	북한 환경개선 지원 방안: 농업분야 및 에너지효율성 개선 관련	손기용	저	5,000원
97-06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주변4국의 입장 분석: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박영호·배정호·신상진·조한범	공저	5,500원
97-07	통일한국의 위상	육태환·김수암	공저	6,000원
97-08	북한 간부정책의 지속과 변화	김성철	저	4,500원
97-09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체제개혁 비교연구	조한범	저	4,500원
97-10	김정일 정권의 안보딜레마와 대미·대남정책	홍용표	저	4,000원
97-11	북한의 지방행정체제: 중앙·지방관계 및 당·정관계를 중심으로	최진욱	저	5,000원
97-12	북한인권문제와 국제협력	김병로	저	6,000원
97-13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인도적 지원사례	이금순	저	6,000원
97-14	미국의 대북한 경제정책: 현황과 전망	김규륜	저	3,000원
97-15	통일교육 개선방안 연구	황병덕	저	5,000원
97-16	통일이후 북한지역 국유재산 사유화방안 연구	조민	저	5,000원
97-17	김정일 문예정책의 지속과 변화	이우영	저	4,500원
97-18	북한의 국방계획 결정체제	정영태	저	5,000원
97-19	'90년대 북한체제의 위기와 변화	박형중	저	4,500원
97-20	북한의 제2경제	최수영	저	5,000원
97-21	미·북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북정책 방향	박영호	저	5,500원
97-22	북한 장래에 대한 일본의 시각	김영춘	저	3,000원

97-23	북한의 관광실태와 남북한 관광분야 교류·협력방안	김영운	저	6,000원
97-24	클린턴 2기 미국의 대북정책	이헌경	저	4,000원
97-25	북한과 주변 4국 및 남한간 갈등·협력관계, 1984~1997	박종철	저	5,500원
97-26	북한외교정책 결정구조와 과정: 김일성 시대와 김정일 시대의 비교	허문영	저	7,000원
98-01	북한사회의 불평등구조와 정치사회적 함의	김병로·김성철	공저	6,500원
98-04	남북한이산가족 재결합시 문제점과 대책	임순희	저	4,000원
98-05	북한 외자유치 법령의 문제점	제성호	저	6,500원
98-06	미국의 대중·대베트남 관계정상화 과정 비교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함의	이교덕	저	4,500원
98-08	경수로사업과 남북관계 개선방안	홍관희	저	4,000원
98-09	남북한 교차승인 전망과 한국의 외교·안보정책방향	박종철	저	6,000원
98-10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전략	신상진	저	4,000원
98-11	북한 대외무역의 특성과 무역정책 변화전망	임강택	저	7,500원
98-12	한국의 대미 통일외교전략	박영호	저	5,500원
98-13	통일독일의 군통합 사례연구	손기웅	저	5,500원
98-14	한반도 문제를 위요한 미행정부와 의회의 협력과 갈등	옥태환	저	4,500원
98-15	NGOs를 통한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 증진방안 연구	조한범	저	4,000원
98-16	남북한 통신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김규륜	저	3,500원

98-17	분단국 경제교류·협력 비교연구	황병덕	저	6,000원
98-18	북한의 해운산업 현황과 해운분야 남북한 협력 방안	김영운	저	6,000원
98-19	중·대만 비정치 분야 교류·협력 실태에 관한 연구	최춘흙	저	3,000원
98-20	조총련계 기업의 대북투자 실태	배정호	저	4,000원
98-21	일본의 대의원조 정책 연구: 북·일관계 정상화와 남북한관계	김영춘	저	3,500원
98-22	한반도의 군사적 투명성 재고전략: 점진적·포괄적 구상	진성훈	저	7,500원
98-23	미국의 4자회담 전략과 한국의 대응책	이헌경	저	5,000원
99-01	미귀환 국군포로문제 해결방안	제성호	저	5,000원
99-02	탈북자 문제 해결방안	이금순	저	5,000원
99-03	한반도의 비핵화실현과 남북한·일본 3국비핵지대창설	진성훈	저	6,000원
99-04	탈냉전기 일본의 국내 정치변동과 대외정책	배정호	저	6,500원
99-05	남북 경제교류·협력 발전방안 연구: 추진성과 평가 및 발전대책	김규륜	저	5,500원
99-06	북한의 인사행정	최진욱	저	4,500원
99-07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구동동 지역 적용에 관한 연구	김영운	저	7,000원
99-08	김정일의 퍼스낼리티·카리스마·통치스타일	김성철	저	5,000원
99-09	북한경제의 변화와 인센티브구조: 비공식부문의 확산에 따른 개혁 전망	오승렬	저	5,500원
99-10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 경제부문 중심	최수영	저	5,000원

■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1996	옥태환·전현준·제성호의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6</i>	옥태환·전현준·제성호의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1997	김병로·송정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7</i>	김병로·송정호 공저	\$11.95
북한인권백서 1998	최의철·송정호 공저	7,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8</i>	최의철·송정호 공저	\$11.95
북한인권백서 1999	최의철·서재진·제성호의 공저	7,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9</i>	최의철·서재진·제성호의 공저	\$9.90
북한인권백서 2000	제성호·최의철·서재진의 공저	7,000원

■ 연례정세보고서

96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6~1997	6,000원
97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7~1998	5,000원
98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8~1999	5,000원
99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9~2000	6,500원

■ 학술회의 총서

96-01 북한정세 변화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7,000원
96-02 탈냉전기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9,000원

96-03	북한경제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전망	9,000원
96-04	북한의 대외관계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7,500원
96-05	남북한관계 현황 및 '97년 정세 전망	7,000원
96-06	4자회담과 한반도 통일전망	8,500원
97-01	4자회담과 한반도 평화	6,500원
97-02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7,500원
97-03	한반도 통일을 향하여: 정책과 국제환경	7,000원
97-04	남북한 사회통합: 비교사회론적 접근	8,500원
97-05	한반도 급변사태와 국제법	4,000원
97-06	북한 경제난의 현황과 전망	7,500원
98-01	남북협력: 새로운 지평을 향하여	9,000원
98-02	대북정경분리정책: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7,500원
98-03	동·서독의 정치통합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5,500원
98-04	동북아정세 변화와 남북 및 일북 관계 전망	6,500원
98-05	남북한관계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5,500원
98-06	법적 관점에서 본 독일 통일	2,500원
99-01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I): 장기·포괄적 접근 전략	5,500원
99-02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II): 장기·포괄적 접근 전략	7,000원
99-03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III): 장기·포괄적 접근 전략	6,500원
99-04	남북이산가족문제 해결방향	5,500원
99-05	탈북자의 보호 및 국내적응 개선방안	5,000원
■ 통일문화시리즈		
96-01	통일과 북한 사회문화(상)	10,000원
96-02	통일과 북한 사회문화(하)	9,500원
97	바람직한 통일문화	9,500원

■ 논총

통일연구논총, 제5권 1호 (1996. 6)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5권 2호 (1996.12)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6권 1호 (1997. 7)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6권 2호 (1997.12)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7권 1호 (1998. 9)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7권 2호 (1998.12)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8권 1호 (1999)	7,5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i> , Vol. 5 (1996)	6,5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i> , Vol. 6 (1997)	9,0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i> , Vol. 7 (1998)	8,000원

■ Translation Series

97-01 NORTH KOREA IN CRISIS: An Assessment of Regime Sustainability	7,000원
97-02 The Making of a Unified Korea: Policies, Positions, and Proposals	6,500원

■ 기타

북한의 위기상황인식에 관한 연구

목정균 저 5,500원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 및 영문 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http://ku.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일반회원 및 기관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
(재가입 안내장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년평균 25-30권), 학술회의 총서(년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년평균 10-15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본 연구원의 지난자료를 5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 5) 본원 홈페이지에서 모든 발간물에 대한 초록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며, 1997년 이후 발간물은 원문을 온라인 상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기관회원의 경우 담당자 1인만 가능합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142-076)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901-2559, 901-2529 FAX:901-2547)

회원가입신청서

성명				
근무처				
	직위			
간행물 받을 주소	(우편번호 :)			
연락처	전화		FAX	
	전자메일			
전공 및 관심분야				
회원구분	일반회원 () 학생회원 () 기관회원 ()			
본인은 통일연구원의 정기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인)				

※ 본 신청서를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FAX:901-2547)

※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 (예금주: 통일연구원)

※ 본 연구원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어떤 서비스를 더 제공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본 신청서 뒷면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

경제부문 중심으로

인쇄/1999년 12월 26일

발행/1999년 12월 29일

발행처/통일연구원

발행인/곽태환

편집인/북한경제사회연구실

등록/제2-2361호(97.4.23)

(142-076)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화(대표) 900-4300 (직통)901-2526 팩시밀리 901-2544

© 통일연구원, 1999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 734-6818 · 사무실: 394-0337

ISBN 89-87509-88-5

5,000원